

지식공유

특별호
VOL. 03

Brief



지식공유브리프 바로가기

지식공유의 방향을 다시 묻다:
2025년 특별호를 기획하며



특별호

국제 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사업(KSP)의 역할



주요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주요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과 지식공유사업의 역할



개발협력/지식공유 이슈특

EIPP는 KSP의 대안이 될 수 있나?



AI를 위한 NETWORK



Accelerating Digital Synergies:
What Opportunities for a
Strengthened EU-ROK Partnership?



개발협력/지식공유 동향 분석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도전과제와 한국의 경제협력 방향



말레이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한-말레이시아 협력과제



CID 연구포커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쟁점 및 현안: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YKSP 소식

KSP 출장 소회 인터뷰



행사

국제개발협력학회 하계학술대회



KDI-World Bank 글로벌 포럼



KSP/EIPP 포커스

디지털 금융 혁신과 국제개발협력:

우즈베키스탄 KSP Plus 사례를 통한 시사점



온두라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발전을 위한
지식공유 성과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지식공유의 방향을 다시 묻다: 2025년 특별호를 기획하며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awaker2@kdi.re.kr

최근 국제 경제 및 통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도주의적 접근과 글로벌 연대의 가치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축을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자국의 경제안보와 국익 증진을 고려한 전략적 협력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자주의 약화, 보호무역 강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과 같은 국제 질서의 변화는 개발협력의 목적, 방식, 그리고 협력 대상국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지식공유브리프 특별호는 ‘글로벌 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와 KSP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특별호에서는 △국제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사업의 역할, △주요 공여국의 정책 동향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과 지식공유사업의 역할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의 시각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특별호는 지식공유브리프의 디자인을 새롭게 개편하고, 외국 전문가의 영문 원고를 수록하는 등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새로운 시도를 반영하였습니다. 유럽정책센터(EPC)의 정책분석가 Giulia Torchio는 “Accelerating Digital Synergies: What Opportunities for a Strengthened EU-ROK Partnership?”라는 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 시대 한-EU 협력의 가능성을 조망하며, 우리 개발협력의 협력 지평을 넓히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본 특별호가 독자 여러분께 국제개발협력의 변화하는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앞으로의 전략 수립에 있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공유브리프는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사업, 연구, 현장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와 목소리를 담아내며,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김정욱 드림

국제 경제 및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사업(KSP)의 역할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

sjkang@korea.ac.kr

한국경제의 압축 성장과 선진국 추월

대한민국은 전쟁과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고난을 딛고, 불과 60여 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다. 1960년 1인당 실질 GDP(2015년 기준)는 1,027달러에 불과했으나, 2023년에는 34,121달러로 늘어 세계 32위를 기록했다. GDP 총액은 세계 11위에 올라섰으며, 이 같은 성과는 국제적으로 '한강의 기적',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렸다(Lucas, 1993; 세계은행, 1993).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잡는 데 그치지 않고 필리핀,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그리스 등 여러 나라를 추월했다.

이러한 성장은 자유시장에만 맡겨진 결과가 아니었다.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 중화학공업 중심의 전략적 산업정책,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구축이 토대가 되었고, 이와 동시에 자동차 부품 국산화와 같은 수입대체 전략도 병행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이 결합해 노동력의 질과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성공은 경제정책, 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만들어 낸 압축 성장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세계 통상 질서는 과거 자유무역 중심에서 최근 보호무역과 경제안보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세기 후반까지 세계경제는 WTO 체제와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 속에서 성장했지만, 2000년대 이후 중국의 급부상과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과제가 새로운 긴장을 불러왔다. 특히 2017년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관세전쟁과 WTO 규범 회의론은 소위 '트럼프 라운드(Trump Round)'라 불리며 기존 자유무역주의 체제에 큰 균열을 가져왔다. 그 결과 '경제안보'라는 개념이 부상했는데, 이는 단순히 무역 이익을 넘어서 국가안보와 공동가치까지 경제질서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국제 경쟁도 격화하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 제도(CBAM)와 ESG 규범은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통상 규범으로 만들었고, 기업에도 새로운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 디지털 통상에서는 데이터 이동, 전자상거래, 인공지능 규범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올라 미국, 중국, EU 간 규제 철학의 충돌을 낳고 있다. 결과적으로 세계 무역 질서는 자유무역에서 기술, 안보,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확대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은 국제개발협력에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 한국은 과거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원조를 받던 나라였으나, 이제는 공여국으로 전환해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했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도 꾸준히 증가했다. 1990~1999년 동안 ODA 총규모는 약 14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2010~2020년에는 약

189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2020~2023년 4년간에는 111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3년 한 해에는 31.3억 달러로 DAC 회원국 가운데 14위를 기록했다(지표누리 e-나라지표).

한국의 ODA는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나뉜다. 양자원조는 보건·교육·행정 역량 강화 중심인 무상원조와 인프라 건설과 경제발전 프로젝트를 위한 유상원조(차관)로 구성된다. 최근에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보건 등에 대한 지원 비율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협력은 단순히 자금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개발도상국의 자립적 역량 강화를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KSP의 지식공유 플랫폼 역할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대표 사례 KSP는 2004년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한 초기 사업 이후 현재는 97개국, 12개 국제기구와 협력하며 2024년까지 총 921개 사업, 2,007개 세부 사업을 추진했다(KSP 홈페이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며 KDI, 정부 부처, 학계,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구조이다. 이로써 KSP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및 정책 자문을 한다. KSP는 한국이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의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둘째, 수원국 역량 강화에 기여한다. KSP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공동 학습(co-learning) 방식을 지향한다. 수원국 정책 담당자와 함께 공동연구와 연구, 세미나,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정책 분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고, 장기적으로는 현지의 제도적·행정적 역량을 강화한다.

셋째, 국제개발협력을 확대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KSP는 한국 ODA 사업의 정책 협력 창구로 기능한다. 초기 단계에서 정책 대화와 자문으로 협력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속 인프라 투자, 차관 지원, 다자개발은행(MDB) 연계사업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민간·학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KSP는 한국 내 정부 부처,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학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이로써 수원국과 한국 간의 정책 네트워크와 신뢰 관계가 구축되며, 장기적으로는 양국 간 경제·외교 관계 강화에도 기여한다.

다섯째, 글로벌 이슈 대응에 기여한다. 최근 KSP는 전통적 경제정책 분야를 넘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보건안보, 포용적 성장 등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역할도 확대하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하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으로서 영향력을 넓히는 기반이 된다.

KSP의 역할과 전망

한국경제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세계화를 달성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기술·안보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은 한국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시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KSP처럼 다른 국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차별적인 발전공유 프로그램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한국은 디지털, 기후, 보건 등 미래 의제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한층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공여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주요 특징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곽재성

국제개발협력학회 학회장

kwakwak@khu.ac.kr

2025년, 국제개발협력 환경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지정학적 긴장, 인도주의 위기, 다자주의 후퇴와 주요 공여 주체의 재정 압박이라는 복합적 도전 과제 속에 놓여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개발협력의 흐름을 형성하는 영국과 미국 등 핵심 ODA 공여국의 개발협력 정책 특징과 최신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오랫동안 국제개발협력의 교과서 역할을 했으며, 전형적인 공여국의 DNA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던 영국도 빠르게 대외원조에서 이탈하고 있다. 키어 스타머 영국 노동당 당수는 지난해 9월 유엔에서 영국이 “개발 분야의 선도적 기여국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만에 영국 원조예산이 21세기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발표가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국방비 증액을 위해 해외 개발원조 예산이 영국 국민총소득(GNI) 대비 0.5%에서 0.3%로 삭감될 예정이고, 이는 약 60억 파운드(약 9조 6,000억 원)가 줄어드는 규모이다. 보란 듯이 GNI 대비 ODA 비율의 0.7% 달성을 법제화한 지 딱 10년 만이다. 이는 동시에 지난 100년간 국제개발협력의 패러다임을 개척해 온 영국 리더십의 종말을 의미한다.

미국 다음으로 최대 공여국인 독일의 경우 안정적인 개발협력 지원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독일 경제협력개발부(BMZ)의 2025년 예산이 2024년보다 약 10억 유로 감소한 103억 유로로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했고, 인도주의적 지원도 2026~2028년 59억 유로로 감소하는 등 하향세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다자주의 및 글로벌 보건, 우크라이나 지원에서 꾸준한 역할을 유지하려 한다. 2025년 4월 미국의 WHO 지원 철회 이후 독일은 WHO에 200만 유로 추가 기여를 결정했고, 8월에는 2025~2026년 우크라이나에 대한 105억 달러(약 9억 유로) 지원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다른 한편, 옆 나라 네덜란드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을 0.62%에서 0.44%까지 축소할 계획이고, 이는 극우 정당이 참여한 연립 정부의 반이민 정책 지출 증가 및 국익 우선 정책 기조와 관련이 있다.

이미 절벽에 서 있던 유럽 공여국들을 뒤에서 밀어준 건 2025년 트럼프의 재등장이다.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개발 원조 전면 90일 정지(Executive Order 14169) 명령’을 내린 바 있고, 2025년 7월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이 공식 해체시켰고, 국무부(State Department)가 외국 원조 집행을 전면 관할 및 시행하도록 했다. 또 의회 승인된 외교·개발 예산 중 약 22% 삭감 법안이 상원에 제출되었으며, 행정부는 기승인된 예산 중 약 6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원조 예산도 철회할 예정이다. 트럼프 1기 때 원조 삭감 시도가 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기 때문에,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한 2기 트럼프 시대가 오자 대외원조 축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 최대 규모의 무상 원조기관이 사라지고 대규모로 원조가 삭감된 사건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개발협력의 핵심 요소인 빈곤퇴치, 취약계층 지원, 인도적 지원의 위기이다. 미국은 인도적 지원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공여국으로서 2024년에는 전 세계 인도적 지원의 42%에 해당하는

약 640억 달러를 제공한 바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경우 미국의 원조재원이 전체 인도적 지원의 70%를 차지한다.

둘째, 이와 같은 예산을 받아 집행 또는 수행하는 다자기구, NGO, 개발컨설팅, 그리고 여러 기업의 위기, 즉 개발협력 생태계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 워싱턴에서는 20년 경력의 고급 개발협력 전문가가 인턴십 자리에 지원하는 광경이 목격되고 있다.

셋째, 트럼프의 충격요법은 기존 공여국의 ODA 삭감 결정에 정치적 부담을 덜어 준 셈이 되었다. 이미 하향 추세를 보인 국방비도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유럽에, ODA 재구조화를 준비하고 있던 일본에, 그리고 국내 정치 이슈로 대외원조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에.

이상과 같은 기존 공여 주체의 뚜렷한 퇴보를 지난 세기를 회고하며 거시적으로 보면, 뉴(new) 노멀이 아닌 현실주의적 구(old) 노멀로 회귀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원래 이들은 자국의 이익을 내걸고 식민지 패권을 다투던 제국주의자였으니, 남을 도와주는 선한 얼굴의 이면에는 철저한 '국익'이 도사리고 있었고, 이제 그 가면을 벗어던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990년대 동서냉전이 이완된 이후 합의된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와 MDGs-SDGs 체제는 다소 예외적인 협력과 컨센서스의 시대, 혹은 착하고 싶은 제스처였다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근거는 ODA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대폭 삭감한 이들이 개발금융이나 민간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은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USAID나 DFID는 사라졌고, 바야흐로 DFC(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와 BII(영국 국제투자공사)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2025년 국제개발협력 환경은 전반적인 삭감과 구조조정의 압박 속에 있다. 대응 방식은 영미 계열 공여국의 뚜렷한 퇴보와 독일, 일본의 관망세로 갈리고 있다. 이들 흐름은 후발주자로서 빠른 ODA 성장세를 보인 우리나라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할까? 일단 기존 공여국이 ODA를 줄이거나 정체하고 있는 원인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는 인식하에 국제개발협력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는 추세가 2025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왔다. 한국의 개발협력에 기존 공여국의 빈 공간을 메꾸려는 전향적인 움직임도 감지되었다. 한국 ODA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도 제법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지난 정부 시절 ODA를 둘러싼 일련의 스캔들과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2026년 예산의 대폭 감소(22%)가 예상된다. 물론 이는 2023년 이후 지나치게 늘어난 ODA 예산의 증가 폭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성격도 있다. 예산이 줄어든 만큼 합리적 배분이 중요하고, 소규모 사업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양적인 측면과 더불어 질적인 개혁을 도모할 때이다. 즉, 우리는 신흥 공여 주체로서 그리고 한국적 상황이 낳은 다소 미숙하고 비효율적인 ODA 추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위기는 기회인 측면도 있으니, 새 정부 출범에 따른 ODA 전략의 구조적 정비, 추진체계의 합리화, 가치와 철학의 정립, 지속가능한 수행 생태계 구축 등 질적 변화를 빠르고 신속하게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분야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대하고 있다. 5년 만에 한 번 올라 말까 한 기회라고.

그래서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잇는다. 45개 이상의 무상원조 시행기관이 난립하는 것이 정상적인 추진체계인가? 우리의 원조 규모로 27개국이나 되는 중점협력국과 기타 파편화된 다수의 협력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민간의 시대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기업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개발금융 체계는 갖추었는가? 현장화된 수행 플랫폼이나 네트워크 없이 출장만 다니면서, 한국인끼리 한글 문서를 양산하는 편한 관행은 지속되어야 하는가? 그나마 현장화된 시민사회조직(CSO)에 대한 ODA 2%의 턱없이 낮은 지원은 개선될 수 있을까? 실무자는 언제까지 회계법인에게 시달리며 영수증을 붙여야 하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떨어야 하는가? ... 불편하지만 무거운 질문을 하나하나 열어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OECD DAC 가입 15년이 지났으니, 이전 내외부적으로 기본을 갖춘 공여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과 지식공유사업의 역할



홍성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협력실 실장

hongsc2@kdi.re.kr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실장

hkbang@kdi.re.kr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글로벌 정치와 경제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념과 체제 경쟁이 본격화되었다가, 베를린 장벽 붕괴로 한 시대가 마무리되었다. 이어 중국의 개방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은 세계를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고 글로벌 공급망(Global Supply Chain)을 촉진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의 격화는 세계 경제 질서를 다시 변모시켰다.

오늘날은 단순한 상업적 교환가치를 넘어 정치적 가치와 경제적 원리가 동시에 작동하는 경제안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경제협력 전략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지식공유사업(KSP)은 여기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새롭게 성찰해야 할 시점이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적 변화

2020년을 전후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첫째, 제품의 생산과 유통 이전의 단계, 즉 '업스트림'에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즉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와 핵심 부품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탈탄소와 신재생에너지 활용이 새로운 규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 태양광, 풍력, 수소, 이를 저장·운송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모든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도체와 희소 광물 등 전략 품목도 단순한 시장 수급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적 원리와 안보 논리에 통제되는 핵심 자원으로 부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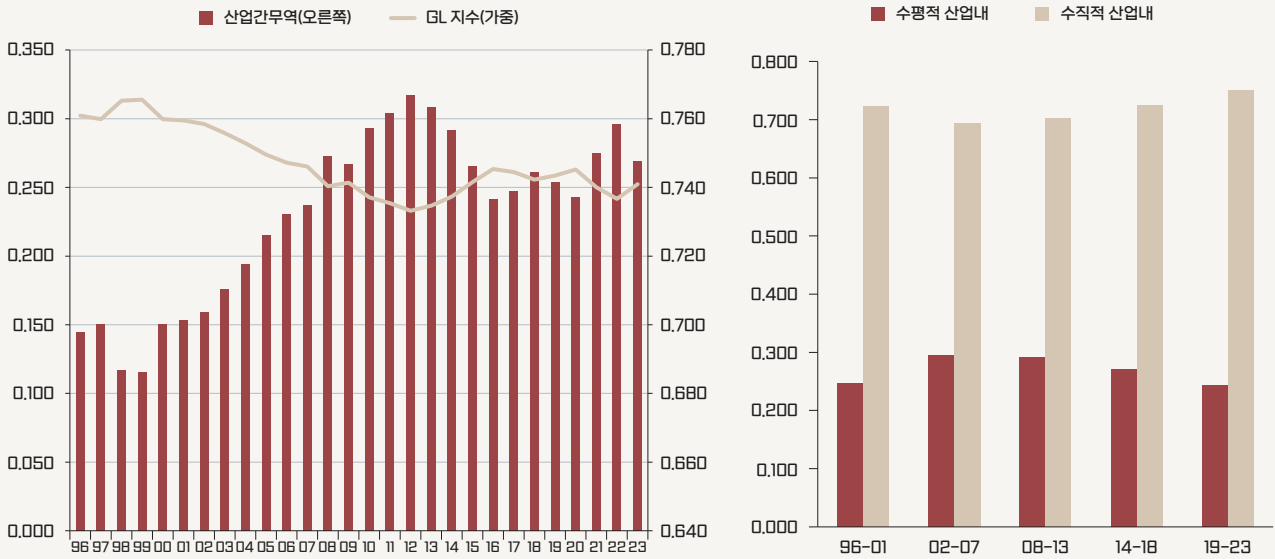
둘째, '다운스트림'에서는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이 진행 중이다. 상품 판매가 부가가치 창출의 종결점을 의미하던 이전과 달리,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하면서 생성하는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사슬을 형성하는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고 있다.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혁신 생태계의 출발점이다. 플랫폼 경제, 스마트 물류, 스마트 시티와 같은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했으며, 공공서비스와 사회 인프라 전반에 디지털·그린 전환이 확산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전환은 국가 간, 산업 간,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빅테크 의존, 데이터 주권 문제, 기술 종속은 정치적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중 갈등 속에서 제3의 '스마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이다. 산업 내 무역에서 가치공유 무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WTO 체제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수직적 분업 구조에 기반해 긴밀한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그러나 팬데믹과 미·중 갈등은 리쇼어링, 기술 이전 통제, 수출 규제 등 공급망 재편을 초래했다. 그 결과 산업 내 무역보다는 산업 간 무역이 상대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그림 1 참조). 주목할

점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ies)' 간의 무역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호 신뢰와 가치 공유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합적 가치사슬 체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림 1 세계무역의 구조적 변화, 1996~2023년



주: 1) GL지수(Grubel-Lloyd Index)는 산업 내 무역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
2) 수평적 및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은 Greenaway, Hine & Milner(1994) 방법론을 이용.

자료: UN Comtrad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계산.

새로운 경제협력 전략과 지식공유사업(KSP)

새롭게 형성되는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제협력 전략과 방향을 고려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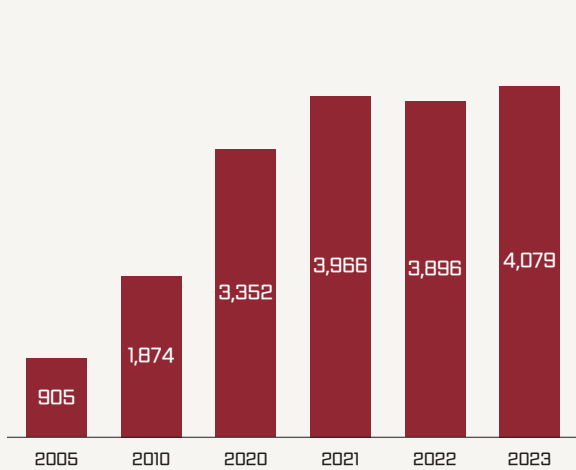
첫째, 새로운 규범과 표준의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 에너지, 부품, 데이터를 포괄하는 가치사슬에서는 새로운 규범과 표준 수립이 필수이다(그림 2 참조). 이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 가치 창출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민관협력으로 국내 혁신 생태계와 글로벌 가치사슬을 연결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통합적 접근과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협력은 단순히 무역과 투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책, 기술, 금융, 자본, 인적 교류를 포괄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 대상국의 혁신 역량과 수요를 진단하는 조사·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혁신 주체로 적극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한다. 경제안보 시대에는 정부의 역할이 과거와 달라야 한다. 규제 완화와 자율화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취약점을 보완하며 전략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 패키지, 기술과 자본을 자원 및 시장과 연결하는 맞춤형 전략, 국가별·산업별 협력 모델 설계 등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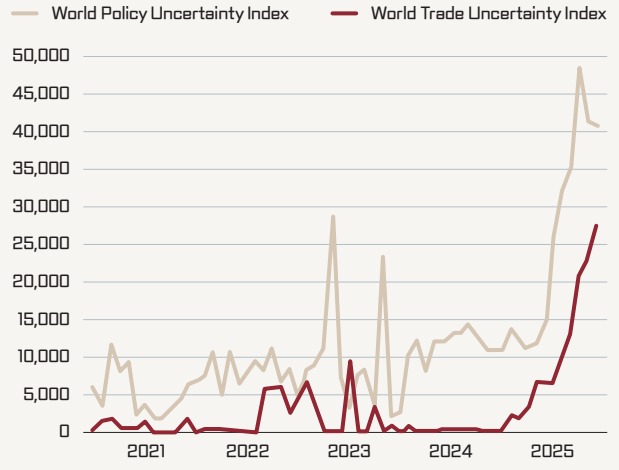
경제협력 전략을 실행하는 KSP의 역할도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 첫째, KSP가 단순한 경험 공유를 넘어 새로운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즉 지식 공유(Sharing)를 넘어 지식의 공동창출(Shaping Together)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과거 한국의

그림 2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건수, 1996~2023년



자료: WTO.

그림 3 무역정책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자료: UNCTAD.

발전 경험을 일반화하여 다른 나라에 제안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경제안보 등 경제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새로운 발전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KSP는 협력국과 함께 변화하는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동시에, 협력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정책과 기술 등의 지식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둘째, 지식 기반 경제협력 패키징 전략을 마련해 제안해야 한다. 경제협력 수단은 무역, 투자, 금융, 기술, 인적 교류, 제도 규범 등으로 다양하다. 협력국의 특성과 한국의 역량을 종합해 맞춤형 패키징을 설계하는 것이 KSP의 중요한 과제이다. 국가 간, 정부 간 협력인 만큼, 자치 부처별·분야별 협력에 그치지 않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패키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에너지, 핵심기술, 디지털 경제 등에서 협력국 정부의 협력 수요와 국내 기업들의 기술, 투자 등 공급 여건이 부합하는 영역을 연결하는 글로벌 민간협력의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

셋째, 지식이나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위험도 분담해야 한다. 지식은 정책이나 기술로 구체화될 때 리스크를 동반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실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분담하는 파트너십(Risk Sharing Partnership)으로 발전해야 한다. 자문이나 대안 제시를 넘어 파일럿 프로젝트, 기술검증(Proof of Concept),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실제 협력국의 실행 부담을 완화해 공유된 지식이 실제 경제적 효과(impact)로 이어지는 경로를 모색하고 동반해야 한다.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자주 인용하며 원칙과 현실의 조화를 역설했다. 이는 오늘날 한국의 경제협력 전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는 현시점에서 KSP는 ‘지식의 공동창출’, ‘글로벌 민간협력 패키징’, ‘실행을 위한 리스크 분담’ 등 세 가지 축으로 진화를 거듭해야 한다. 이로써 한국은 협력국과 함께 지속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결국 경제안보 시대의 한국 경제협력 전략은 지식 기반의 혁신적 파트너십 설계에 달려 있다.



손 의 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초빙연구위원

eyshon@kdi.re.kr

EIPP는 KSP의 대안이 될 수 있나?

본인은 대학교에 재직하며 교통전문가이자 PI(Principal Investigator) 및 Co-PI로서 KOICA, KEXIM, KDI 등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지식공유사업)를 수행했으며, 은퇴 후에는 KDI에서 PM(Project Manager, 사업관리자)으로서 KSP를 수행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은 헝가리를 대상으로 KSP와 차별화된 EIPP(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형태가 상이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인 KSP와 EIPP에 연구진 혹은 사업관리자로 참여하면서 느낀 바를 기술하고자 한다.

KSP의 한계

KSP는 대부분 개도국을 대상으로 8~10개월 기간 내에 3억 원 내의 예산으로 수행된다. KDI 등 총괄기관의 관리하에 외부 연구진(대학 혹은 민간회사)이 우리의 과거(일부 최신) 경제 및 사회 정책의 수립과 집행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협력국가 공무원은 우리 관련 기관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경험을 듣는 기회를 가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KSP가 협력국가에 우리의 경제 및 사회 발전 경험을 전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년 이상 수행된 KSP를 바탕으로 개도국은 우리 경제 및 사회 발전 경험을 습득하는 커다란 기회를 얻었으며, 우리나라에 많은 호감을 갖게 된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 사례가 개도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KSP 등을 비롯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사업에 대한 비판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이나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등 다자기관에서 60년 이상 수행한 ODA사업에서도 거의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설립된 중국 주도의 AIIB(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의 ODA사업에서는 더욱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형태인 EIPP

이러한 KSP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우리 정부는 4년 전부터 EIPP를 수행하고 있다. 1년 이내에 수행되는 KSP로는 우리와는 여러모로 상이한 협력국가의 상황을 연구진이 분석하기 어렵다. 또 우리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 적합한 방안을 연구진이 제시하는 데도 많은 한계가 있다. 더욱이 개도국이 가장 선호하는 즉각적인 인프라(도로, 철도, 공항 등) 투자에 KSP 결과물이 연계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나의 대주제하에 약 3년간 지속적으로 EIPP 3~4개를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대상 국가는 개도국 이외에 중진국과 선진국까지 포함된다.

EIPP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우리 민간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EIPP는 3년간 지속적으로 하나의 대주제를 분석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상황 분석을 토대로

적합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뿐더러, 우리 민간기업의 진출 기회를 돕는 여러 실증사업을 실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헝가리 EIPP 4~5개 중에서 c-its(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사업은 우리 연구진과 민간기업이 부다페스트대학교 및 헝가리도로공사와 협업해 헝가리 도시 죄르의 교차로에 다수의 교통장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형태의 최신 c-its서비스를 도출하고 있으며, 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 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사업은 부다페스트대학교 및 헝가리버스공사와 협업해 괴빌리에 민간기업인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플랫폼을 이용해 DRT서비스를 시민에게 3개월간 시범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공동택배보관함(Shared Parcel Locker)사업은 우리 상황과는 매우 상이하여 우리 민간기업이 진출할 수는 없지만, 헝가리교통연구원 및 부다페스트대학교와 협업해 부다페스트에 적합한 물류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EIPP는 KSP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 1년 미만 단기간에 우리 경제 및 사회 정책 경험을 소개하는 데 그치는 KSP에 비해, 3년 동안 지속하는 EIPP는 협력국가 관련 기관과 협업해 상황 분석을 토대로 협력국가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실질적인 성과물을 낳고 있다. 또 우리 민간기업의 진출을 염두에 둔 실증사업을 실행함으로써 민간기업이 단기간 혹은 중기적으로 직접 협력국가에 진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EIPP는 KSP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KSP가 그러하듯이 EIPP 또한 협력국가에는 물론 우리에게도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EIPP 실증사업을 위해서는 KSP의 연간 3억 원 내외 사업비 이외에 별도의 실증사업에 대한 예산(c-its사업은 3억 원, DRT사업은 4억 원)이 필수이듯이 사업별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투입해야 한다. 또 KDI 등 총괄기관의 PM에게는 우리 연구진과 민간기업, 그리고 협력국가 공동 연구진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그림 EIPP의 주요 특징과 KSP와의 차별성

KSP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기능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EIPP
	'지식공유 플랫폼'		'경제협력 플랫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지식공유를 통한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촉진	목적	협력국의 인프라 사업 기획·재원 조달 방안 등 종합적 자문을 통한 협력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 및 양국 간 경제협력 촉진	
	소규모(국별 약 3~4억원)	규모	대규모(국별 약 20억원/년)	
	단년도(1년)	기간	다년도(5년 이내)	
	경제개발·산업무역 등 (정책 중심) * 협력국 수요 기반	주요 협력 분야	디지털·그린 등 (경험 유망 혁신산업 중심) * 협력국과 공동 선정	
	제도 개선,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인프라 개발·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	사업 범위	KSP 사업 범위 + 소규모 시범사업 등 프로젝트 이행 기반 마련 포함	
	정책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협력국 정책개선,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결과 공유	성과 목표	정책·기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추진, 우리 기업 해외진출·수주 등 연계	

자료: KDI CID 내부 자료.



이정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팀장

springmarch3@korea.kr

AI를 위한 NETWORK

생각의 기원(정보의 처리와 연결)

1906년 노벨 의학상 수상자이자 뇌과학의 아버지인 산티아고 라몬 이 카할(Santiago Ramon y Cajal)은 우리의 뇌세포인 뉴런(Neuron)이 뇌의 정보처리와 정보전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1999년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정보의 구조적 연결이 가치를 만든다고 했으며, 2012년 지식의 미래를 고찰한 데이비드 와인버거(David Weinberger)는 정보를 연결함으로써 집단지성과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뉴런이 정보의 처리와 전송을 동시에 담당하며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인터넷 세상에서 정보는 컴퓨터에 쌓여 있을 때가 아니라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 연결될 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낸다.

AI 시대에 우리가 잇은 것

이렇듯 정보는 처리되고 연결되면서 가치를 창조하는데, 우리는 AI를 이용해 정보를 새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에 할 수 없던 정보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더 빠른 계산기를 발명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류의 지식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정보처리를 넘어 정보연결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뇌 속 뉴런이나 피터 드러커의 통찰처럼 빠른 연산을 위해 GPU를 구축하는 것을 넘어 네트워크로 AI를 서로 연결하고 그 속에서 정보가 만나고 상호 작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더할 때 AI를 통한 혁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정보화 혁명의 역사에서 보는 AI 정보혁명

김영삼 문민정부에 이어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정보의 연결에 주목했고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 수준의 IT 강국으로 만들었다. CDMA 기술의 선제적 개발과 초고속 인터넷 전국망 구축으로 대한민국 정보화 혁명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는 정보의 전략적 가치를 일찍 깨닫고 정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단행한 덕분이다.

당시에 선견지명을 갖고 구축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기반으로 사람들은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서로 지식을 축적하고, 검색하고, 활용하는 On-Line 세상을 만들었다. AI 정보혁명에서는 사람이 인터넷 공간에 접속하여 AI를 활용해 서로 지식을 축적하고, 검색하며 지식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AI-On-Line 세상을 만들 것이다.

지난 IT 혁명에서 구글, 메타, 네이버가 인터넷에서 탄생하는 새로운 가치를 인류의 삶에 적용하여 IT산업을 만들었듯이, AI 정보혁명도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공간에서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활용 방법과 지식, 가치를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것이다.

AI 시대의 연결(NETWORK For AI)

이렇듯 AI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AI를 위한 연결을 적시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AI 정보화 혁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Ericsson). 지난 IT 혁명기에 선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처럼, 임계점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많은 AI 기기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고, 새롭게 등장할 AI 서비스의 요구 성능을 충족하는 AI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AI 선도국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나갈 때 네트워크 도로가 꽉 막혀서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뒤늦게 후회하는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로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된 AI 파워를 연결하여 Hyper AI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IoT에 지능을 입힌 Physical AI는 독자적으로 GPU와 AI SW를 적용하거나 NETWORK를 통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독자적인 Physical AI는 GPU 수 증가에 따른 급격한 비용 상승과 배터리 부족에 직면할 것이다. 전국에 인프라가 있는 네트워크는 Physical AI가 필요로 하는 컴퓨팅 파워를 분산하여 제공하여 AI 서비스의 저비용화를 이룩하고, 모두가 빠르게 AI를 일상에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여 주요국 대비 신속한 AI 전환과 확산을 가능케 할 것이다.

NETWORK의 여섯 번째 세대 변화

AI 시대에 걸맞은 네트워크로 변화시키도록 ITU-R, 3GPP 등 국제 표준 기구에서 전 세계의 기업과 학자들이 여섯 번째 네트워크 세대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네트워크가 AI의 기술적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충분히 충족해야 할 것이다. AI의 폭발적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초고속, 초저지연, 연결의 안정성, 자동화된 기능을 제공하여 모두의 AI를 위한 충분한 성능 요구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둘째로, 네트워크는 정보전달 도구에서 뉴런화된 도구로 진화되어야 한다. 정보전송 속도로 정의되는 기존 개념에서 정보처리 속도인 QPS(Queries Per Milli-Second) 또는 QPS와 latency를 조합(응답시간)한 성능지표를 추가하여 네트워크를 재정의해야 한다. 앞으로는 1인당 사용하는 컴퓨팅 파워(Queries)가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준 지표가 될 것이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 인프라로서 미래 네트워크의 역할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통신 시장도 음성 무료에 데이터를 별도로 제공하는 기존 요금제처럼, 데이터는 기본이고 컴퓨팅 파워를 프리미엄 서비스로 제공하는 AI 구독경제로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AI를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 AI NETWORK 고속도로

더 똑똑한 AI 서비스를 사용하려면 싱글코어보다는 멀티코어 AI가 필요하고, 이는 NETWORK로 연결된 AI가 담당한다. 뇌의 뉴런이 정보처리와 정보전송을 동시에 구현하여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손안의 AI는 AI RAN과 AI 클라우드를 통해 뉴런화된 Network로 구현된다.

한편,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지 못하는 기업, 국방, 정부에는 Private AI Network가 구축될 것이다. 클라우드 기반 대규모 AI를 위해서 AI 데이터센터용 네트워크 신경망도 고도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구축하고 운용함으로써 B2B, B2G 시장도 만들어질 것이다.

IT 정보화 혁명기의 구글과 메타는 정보를 연결해 가치를 만들고 잠금효과와 네트워크효과, 현상 유지편향의 정보산업 특성에 기대 약 20년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AI 시대에 GPU나 AI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AI에서 파생되는 AI 정보산업을 선점하려면 AI 고속도로(Network)라는 정보 고속도로를 먼저 구축하고 이러한 인프라 안에서 국가의 산업과 국민이 누구보다 AI를 잘 활용하도록 AI 사용 역량을 배양하고 산업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Accelerating Digital Synergies: What Opportunities for a Strengthened EU-ROK Partnership?



Giulia Torchio

European Policy Center(EPC)
Policy Analyst

g.torchio@epc.eu

지난 3월 한국과 EU 간의 디지털무역 협정이 타결되었다. 2015년 발효한 한-EU 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이 이번에 타결된 최신 규범으로 대체될 예정이고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교역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원고는 유럽정책연구소(European Policy Center) Giulia Torchio 연구원의 기고문으로,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아 EU와 한국의 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를 조명한다. 디지털 규제, 디지털 기술, 무역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측이 어떻게 파트너십을 강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경제안보에 대응하고 디지털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EU 간 협력이 미래의 공동의제로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Introduction

Earlier this year,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signed a landmark Digital Trade Agreement (DTA) that deepened a decade of close cooperation. The Agreement supplements the 2010 Free Trade Agreement (FTA), the 2022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and a research affiliation with Horizon Europe. At the core of this strategic cooperation between the EU and the ROK are shared objectives, values, and economic interests.

Both countries are firmly committed to a digital transition that aligns with democratic values and share complementary aspirations to enhance their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tatus as digital regulators. Additionally, considerable market sizes, critical dependencies on foreign competitors and security imperatives also pose the EU and the ROK as strategic diplomatic partners.

While, for now, deepening bilateral cooperation has focused on boosting trade, researching critical technologies (such as 5G, 6G, Artificial Intelligence, quantum computing, etc.), and promoting their safety, there is potential for more. Building on their shared interests, the EU and the ROK should deepen their digital diplomatic engagement and cooperate more closely on digital governance and digital skills development, among other areas.

This contribution aims to discuss the EU's and the ROK's digital strategies and identify key areas in which strengthened cooperation is not only mutually beneficial but also feasible and aligned with the current strategic objectives of both partners.

The European way

The EU is often regarded as a regulatory heavyweight. In the past, the Union has been able to extend the imposition of its digital standards internationally, thanks to, among others, its considerable market size. This phenomenon has been dubbed by experts the “Brussels Effect.”

As of early 2025, the EU’s impressive digital rulebook counted 101 laws, spanning from data and privacy to cybersecurity, e-commerce, and competition. Despite the different focus, all these policies have one thing in common: their vision for a human-centric, fair, and inclusive future digital environment in which technology serves societal well-being and democratic values.

This is thanks to the Union’s overarching digital strategy, the Digital Decade, which articulates objectives and sets targets that are instrumental to achieving the EU’s digital ambitions by the end of the current decade. Progress on these targets is monitored annually by the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Communications Networks, Content, and Technology (DG CNECT) and then made public through comprehensive overviews as well as country-specific reports.

The EU is also actively engaged in digital diplomatic relations with like-minded partners through fora such as the G7 and G20, as well as in bilateral discussions under the Trade and Technology Council (TTC) and digital partnerships. On June 5, 2025, the EU Commission and the European External Action Service (EEAS) presented the EU’s International Digital Strategy, which focuses on expanding the network of partnerships, supporting like-minded countries in their digital transition, and strengthening global digital governance.

South Korea’s more successful approach to digitalisation?

Although often overlooked in Europe, South Korea has a strong and long-standing tradition of digital policy development, with initiatives dating back to the 1980s. Recently, the country has sought to establish itself as an alternative to more traditional models of technology governance (the European, Chinese, and American approaches). Now, the ROK can rely on open data policies, laws on information protection, intelligent informatisation, and AI.

Overall, the South Korean approach to digitalisation combines a positive regulatory vision with a strong focus on harnessing the benefits of open data, significant investments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R&D) of critical technologies, and particular attention to international standards.

In terms of strategies, South Korea’s current digital priorities include boosting R&D investments in tech (especially in AI, semiconductors, 5G, 6G, and the metaverse), developing widespread connectivity infrastructure, and promoting digital government innovation. These priorities are supported by the country’s globally competitive companies in the fields of electronics, semiconductors, and software services, to name a few.

As per the external dimension, the ROK is actively engaged in digital diplomacy and discussions with like-minded partners. In the last decade, the country has signed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s with Singapore (the KSDPA, in 2022), the UK (in 2023), and the EU (in 2023).

EU-ROK cooperation in the years

Extending over a decade, the EU-South Korea strategic partnership boasts a considerable number of initiatives. These have, over the years, contributed to bringing the two economies together, created mutually beneficial interdependencies, strengthened R&I ties, and attempted to secure the value chains of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The first instance of EU-ROK cooperation dates back to 2006 with the Agreement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hich laid the foundation for joint efforts in research and innovation (R&I). Since then, the partnership has developed to include South Korea in Pillar II of Horizon Europe, where it participates in nearly 60 projects.

Then in 2010, Europe and South Korea strengthened their broader relationship to a strategic partnership through an FTA that eliminated most import duties and addressed non-tariff barriers to trade in key sectors, such as pharmaceuticals and electronics. According to the Commission's estimates, the EU-ROK FTA has resulted in a 96% or higher increase in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over the last decade.

In November 2022, Europe and South Korea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ir strategic partnership by signing a Digital Partnership. The objective of the agreement is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echnologically advanced partners in areas such as semiconductors, 5G and beyond, AI, platforms, and cybersecurity, to name a few.

Lastly, earlier this year, the EU and the ROK announced the signing of a landmark EU-Korea Digital Trade Agreement. The latest accord complements the 2010 FTA, further solidifies the two digital economies, and aims to promote cooperation on mutually beneficial digital policies.

A Stronger EU-ROK Relationship: What Should It Look Like?

Although in principle, the partnership between the EU and South Korea is a strong one,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Specifically, despite the high-level ambitions, cooperation between the two actors is often limited by a low level of commitment typical of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diplomacy). The lack of concrete initiatives for technological, industrial and infrastructure partnerships beyond research efforts constitutes a missed opportunity for valuable EU-ROK collaboration.

Recognising the alignment between their respective economic security strategies, shared visions for their digital transformations, and complementary strengths, the two partners should engage in a stronger relationship. Closer cooperation could be easily achieved in areas such as digital innovation, digital governance, and securing digital infrastructure.

According to OECD data, South Korea leads in innovation and connectivity, is a trailblazer country for the digitalisation of public services (e-government), and performs well in internet usage. Additionally, the ROK has ranked first on the Bloomberg Innovation Index for the past seven years, demonstrating its leadership in R&D, manufacturing, high-tech companies (thanks to local giants such as Samsung, Naver, and LG), education, research personnel, and patents.

In contrast, the latest State of the Digital Decade report reveals that the EU currently lags in connectivity, is far from achieving its basic digital skills target, and remains heavily dependent on foreign tech despite steady progress in digitalising key public services. Adding to this gloomy scenario, Draghi's report on competitiveness also highlighted an overall lack of strategic focus and an issue with diluted common resources at the EU level, which are resulting in a weak tech sector that currently hinders innovation and productivity in the region.

As such, if Europe wants to remain a hub for innovation, investment, and open trade, it should strengthen its industrial partnership with the ROK. This could be achieved by collaborating on the investment, scaling, and industrialisation of deep and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quantum computing, and by fostering closer partnerships between leading South Korean and European companies in the field of AI.

Secondly, despite its more recent tradition as a digital regulator, the ROK was one of the first countries in the world to adopt a comprehensive AI regulation. The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the "AI Basic Act") was passed in January 2025 and is scheduled to take effect starting from January 2026. Besides outlining requirements to comply with ethical principles, setting safety and transparency principles, and regulating high-impact AI systems, the Act also supports the creation of AI infrastructure. It mandates the creation of data centres, discusses the need for training data, and promotes the fostering of SMEs, startups, and other national AI talents.

Due to this strong innovation-friendly approach, the ROK's AI Basic Act has been well-received overall by businesses. However, concerns remain surrounding the classification of high-impact AI, which is notably distinct from the EU's "high-risk" label in that i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iers of risk. The concerns mainly stem from arguments of legal ambiguity of the ROK's approach, which will make implementing the AI Basic Act challenging.

On the contrary, the EU's approach to regulating AI has been heavily criticised by both industry and civil society organisations (CSOs) alike. At the beginning of July, a group of European AI champions addressed a letter to the Commission, asking to pause the implementation of AI rules in Europe and prioritise the quality of the rulebook over the speed of its implementation. Earlier in the year, a group of experts had done the same, but calling for rules on General Purpose AI (GPAI) models to serve the interests of both businesses and citizens.

To reconcile these fractures, European regulators could consider the South Korean model as an alternative. Cooperation in AI governance could, for example, inform both

the EU's future revisions of its AI Act and efforts to simplify the Union's burdensome rulebook through the upcoming digital omnibus. At the same time, it could be advantageous for the two countries to collaborate more closely on advancing AI safety beyond the existing framework of the AI Summits. This could be achieved by having the EU's AI Office, which is the centre of European AI expertise and plays a key role in enforcing the AI Act, working closely with the ROK's AI Policy Centre.

Lastly, amid rising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tensions, both the EU and the ROK must secure their critical digital infrastructure. An example of vulnerable infrastructure that requires closer cooperation is subsea cables, which host the vast majority of international data traffic and provide the high-speed backbone of the global internet and telecommunications network. While reports indicate that the majority of the damage can be attributed to fishing incidents, the number of malicious attacks on subsea cables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and is expected to continue doing so. Repairs are also incredibly costly, averaging several million euros per fix.

As such, partner countries sharing cables, such as the EU and the ROK (which share the FLAG Europe-Asia), must collaborate closely to safeguard infrastructure against vulnerabilities and attacks. Progress on "cable diplomacy" should build upon existing commitments to enhance the resilience of critical digital infrastructure and establish clear strategies to prevent damage, as well as develop rapid response and repair capabilities.

While there is clear strategic reasoning and potential behind deeper EU-ROK digital cooperation, it is also essential to recognise the inherent challenges. To realise tangible results, the EU and the ROK must maintain their commitment, navigate the complexities of geopolitical balancing in the current era, and manage potentially volatile domestic environments on both sides.

Conclusion

While most EU-ROK partnerships to date have concentrated on trade and critical technologies, there is substantial potential for more in-depth engagement. Enhanced cooperation could be developed in the digital domain and should strategically extend into three key areas: **digital innovation**, utilising reciprocal strengths for mutual benefit; **digital governance**, with the ROK's expertise in creating flexible, innovation-friendly digital frameworks guiding the EU's upcoming simplification process; and securing **digital infrastructure**, improving crisis management and safeguarding vital digital assets like undersea cables. By doing so, the EU and the ROK could start forging an alternative, resilient digital order and position themselves as leading innovators.



윤지희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연구원

jhyoon@kdi.re.kr

아세안 경제공동체의 도전과제와 한국의 경제협력 방향

1. 아세안 경제권 현황과 중요성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은 동남아시아의 대륙부(인도차이나반도)와 도서부(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를 포괄하는 지역협의체로서, 1967년 역내 정치적 안정과 안보를 목적으로 창설되었다. 현재 10개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이 아세안의 회원국이다.

2023년 기준, 아세안은 인구 약 6억 8,000만 명과 3조 7,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한국의 두 배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1995년에는 세계 GDP의 2.2%에 불과했던 아세안의 경제 비율은 2023년 3.6%로 확대되었으며, 같은 기간 연평균 약 4.98%로 안정적인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아세안은 이러한 기반 위에 2045년까지 세계 4대 경제권 도약을 목표로, 역내 경제통합으로 생산성과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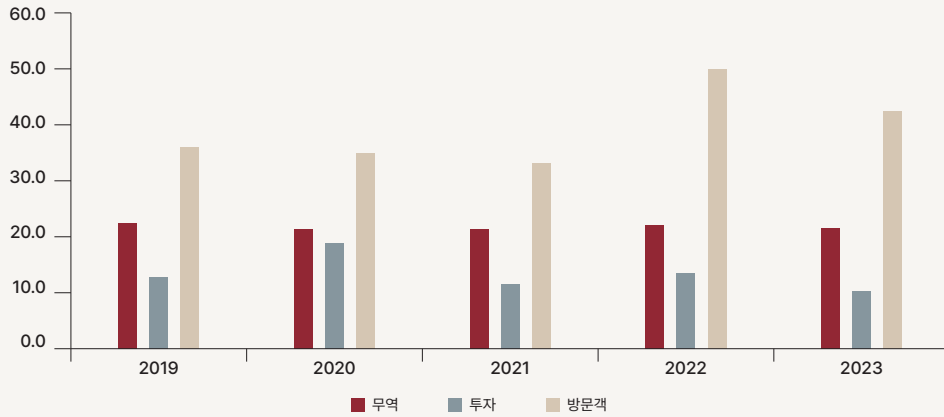
2. 아세안 경제공동체(AEC)의 발전 과정과 성과

아세안은 급속한 경제성장 and 역내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AEC) 구축을 적극 추진해왔다. 그 출발점은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의 출범이며, 이후 경제통합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점차 제도화했다. 특히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중국의 부상, 유럽연합의 경제통합 심화 및 확대는 아세안이 공동체 구축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 채택된 '아세안 경제 청사진(AEC Blueprint)'은 ① 단일시장과 생산기반 구축, ② 경쟁력 강화, ③ 균형 성장, ④ 세계 경제와 통합을 4대 전략축으로 제시했다.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 숙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토대로 효율성과 공동의 경제 이익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5년 아세안은 '하나의 비전, 하나의 정체성, 하나의 공동체(One Vision, One Identity, One Community)'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공동체를 포괄하는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 AC)'를 출범했다. 이 가운데 경제공동체(AEC)는 단순한 무역 자유화를 넘어 국경 간 거래 절차 간소화, 투자 환경 개선, 중소기업 및 신규 회원국 참여 촉진, 세계 경제와 연계를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경제통합을 지향해왔다.

이후 2025년을 목표로 한 'AEC 청사진 2025(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에서는 연계성 강화, 포용성과 회복력 제고, 디지털 경제통합, 무역 원활화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으나, 비관세장벽 완화, 서비스 개방, 숙련 인력 이동, 회원국 간 개발 격차 해소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자료: ASEANstats를 이용하여 계산.

2025년 이후를 준비하는 장기 비전으로 아세안은 ‘아세안 2045: 우리 공동의 미래(ASEAN 2025: Our Shared Future)’를 2025년 5월 제46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했다. 이 비전은 스마트한 단일시장 구축, 포용적 공동체 형성, 다자주의 기반 협력 체계 확립, 기술·디지털 기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미래 위기 대응,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 역내 통화 활용 확대, 재난 재정 조달 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농업 정책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을 핵심 실행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기 비전을 뒷받침하고자 AEC는 ‘AEC 전략계획 2026-2030(AEC Strategic Plan 2026-2030)’을 채택하고, 무역 확대, 인력·기업의 자유로운 이동, 에너지·교통 연결성 강화, 공급망 회복력 제고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기후위기, 기술혁신, 인구구조 변화 등의 복합 위기에 대응해 아세안이 선진 기술 기반의 미래형 단일경제로 도약하고자 하는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표> 아세안 경제통합 논의의 변화

시기/계기	주요 정책	전략 및 목표
1992년 (4차 아세안 정상회의, 싱가포르)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출범	역내 무역 자유화, 경제협력 제도화
2007년 (13차 아세안 정상회의, 싱가포르)	아세안 경제 청사진 (AEC Blueprint)	단일시장과 생산기반, 경쟁력 강화, 균형 성장, 세계 경제와 통합, 2015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목표
2015년 (27차 아세안 정상회의, 말레이시아)	아세안 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연계성(connectivity), 부문 간 협력, 회복력, 포용성, 글로벌 아세안
2025년 (46차 아세안 정상회의, 말레이시아)	아세안 경제공동체 전략계획 2026-2030 (ASEAN Economic Community Strategic Plan 2026-2030)	무역 확대, 기업·인력 자유 이동, 에너지/교통 연결, 공급망 회복력

자료: 저자 작성.

3. 아세안 경제통합 심화(deepening)의 필요성과 도전과제

아세안은 2045년까지 세계 4대 경제권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더욱 심화된 역내 경제통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시장 확대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질서 변화, 기후위기 등 구조적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인식된다. 아세안의 경제통합이 필요한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공급망 재편이다.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기존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흐름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아세안은 지역 내 시장 통합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전략적 자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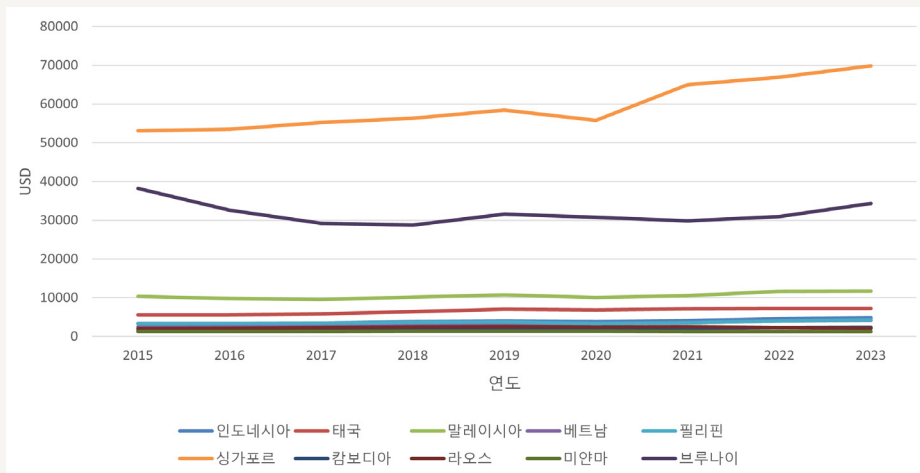
둘째, 기술혁신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이다. 디지털 무역, 전자상거래, 핀테크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이 급속히 확대되는 가운데, 아세안은 규제 조화와 디지털 인프라 연계로 지역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후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장기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처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 중립 정책, 고령화·도시화 등의 인구사회 변화는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아세안 차원의 공동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무역 규범의 조화, 금융협력 확대, 규제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하는 전략적 통합 계획을 수립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ASEAN 2045' 및 'AEC 전략계획 2025-2030'을 바탕으로 단일시장 기반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권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을 이행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도전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회원국 간 경제 발전 수준의 격차이다. 2023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약 6만 9,850달러에 이르는 고소득국인 반면,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는 2,000달러 내외에 머무르며 저소득권에 속한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도 수십 년간 중진국 단계에 머물며 '중진국 함정(Middle-Income Trap)'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소득국으로 도약하려면 생산성 향상과 혁신 중심 성장 전략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와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러나 아세안의 다수 국가는 제도적·기술적 역량이 부족해 경제공동체 차원의 제도 조화와 표준화를 효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급 인력과 재정 여건 부족은 단일시장과 생산기반 구축이라는 핵심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되며, 회원국 간 경제력과 제도 역량의 격차 해소 역시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림 2 ND-Gain 국가지수 지도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둘째, 산업 구조의 이질성이다. 회원국 간 1인당 소득, 경제 규모, 산업 발전 단계가 상이하여 통합 속도와 범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존하는 국가와 첨단 제조 기반을 보유한 국가 간 이해관계가 다르며, 이는 통합정책을 설계하는 데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개발 격차에 따른 노동력 이동 문제이다. 경제통합의 주요 요소인 숙련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은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지만, 경제력 격차가 큰 국가 간에는 급격한 사회적 긴장과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조치가 지연되거나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4. 한국의 경제협력 방향

이러한 도전과제 속에서도 아세안은 대외 협력 강화로 내부 역량을 보완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중요한 기회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 파트너이며, 양측 간 교역 규모는 약 3.5조 달러에 이르고, 공급망 파트너로서 전략적 중요성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한국과 아세안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키고,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AKFTA) 업그레이드, 디지털 전환 협력, 에너지-환경 분야 파트너십 등에서 실질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은 4대 분야는 향후 한-아세안 경제협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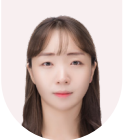
첫째, 한국의 정책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지식공유사업(KSP)'은 아세안의 제도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협력 플랫폼이다. 특히 무역 및 투자 제도, 디지털 정부, 산업정책, 공공재정, 녹색성장 분야에서 KSP를 마중물로 삼아 아세안 각국의 제도 설계, 정책 이행 역량을 높이는 협력이 중요하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아세안 간 공급망 복원력 제고, 무역 디지털화, 표준 조화 등에서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 AKFTA 업그레이드로 비관세장벽 해소, 원산지 기준 간소화 및 증명 부담 감소, 통관 절차 개선 및 효율화를 추진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자 협력 체계와 연계한 전략적 협력이 필요하다.

셋째, 아세안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수요 증가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은 탄소 중립 정책 경험, 재생에너지 기술, 녹색금융 및 기후자원 조성 역량을 공유할 수 있다. 녹색 수소, 스마트 그리드, 에너지 효율화 기술, 기후 적응형 인프라 개발 등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며, 아세안 녹색분류체계(ASEAN Taxonomy) 및 탄소시장 설계 관련 정책 협력도 중요한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은 아세안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 데이터 거버넌스, AI 기반 공공서비스 등의 영역에서 제도·기술·인력 차원의 협력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자상거래 규범 정비, 사이버 보안, 디지털 역량 강화,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등은 AEC 전략계획 및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ASEAN Digital Masterplan)과 연계할 수 있는 주요 협력 분야이다.

이처럼 아세안 경제통합의 구조적 도전과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한국은 정책 경험, 기술 역량, 제도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아세안과 실질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특히 '포괄적전략적동반자관계' 격상을 계기로 지식공유, 공급망 협력, 기후-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등 전략 분야에서 AEC 전략계획과 ASEAN 2045 비전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송지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전문연구원

jesong@kdi.re.kr

말레이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과 한-말레이시아 협력과제

1. 디지털 헬스케어의 부상과 말레이시아 사례 선정 배경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는 2020년부터 매년 '디지털 헬스(Digital Health)'를 주요 기술 트렌드로 선정해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의료 환경,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 의료 접근성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할 핵심 수단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부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재 각국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국가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아세안 지역은 높은 인구밀도와 도시-농촌 간 의료 인프라 격차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곳이다. 「아세안 디지털 마스터플랜 2025」는 개방형 데이터, 민간 기술 활용, 제도 정비 등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혁신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팬데믹 시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원격의료 등 디지털 서비스를 적극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제도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여 의료정보 활용과 보호, 서비스 표준화 등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21년 KSP 과제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표명했으며, 「Digital Economy Blueprint(2021-2030)」로 ICT 기반 의료서비스 확대를 국가 과제로 채택했다. 특히 의료인력 부족(의사 수 OECD 평균의 절반 이하), 지역 간 의료 격차 문제 해결 수단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보완적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2024년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연구는 제도 기반 정비가 필요한 아세안 국가 중 정책 수요가 확인된 말레이시아를 사례로 선정하여 디지털 헬스케어의 현황과 제약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 한국의 정책 경험을 비교·분석해 향후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국제개발협력 확대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말레이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현황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ICT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제공·관리 및 품질향상'으로 정의하며, 「eHealth Malaysia Strategic Plan(2021-2025)」을 통해 이를 ▲전자건강기록(EHR), ▲원격의료, ▲디지털 의료기기, ▲모바일 건강관리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팬데믹을 계기로 빠른 전환점을 맞았다. 정부의 디지털 헬스 전략 수립과 높은 인터넷 보급률이 시장 확대를 견인했으며, 2023년 시장 규모는 약 5억 1,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2027년까지 연평균 9.9% 성장률이 예상되며(Stata 2023), 정부는 보건의료 데이터 통합, 비대면 진료 확대, 민간 생태계 조성을 해당 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사례로 보건부·보험사가 연계된 DoctorOnCall 플랫폼이 있으며, 원격진료, 약 배송, 보험 연계 기능을 통합 제공하고 월간 사용자 수는 300만 명에 달한다. 이 플랫폼은 민간협력 기반 파트너십 모델로서, 향후 한국의 플랫폼 운영 및 공공 연계 경험과 연결하는 협력 접점이 될 수 있다.

3. 정책추진 현황과 제도적 한계

말레이시아 보건부(MOH)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보건의료 체계 개혁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공공·민간 의료정보 연계와 플랫폼 통합으로 전국 단위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는 민간이 의료서비스 공급의 다수를 차지하고, 공공의료에 농촌 등 취약지역에 집중되나 인력·인프라가 부족한 구조 속에서, 도시 중심 의료공급과 민간 보험 중심 보장구조, 공공·민간 간 의료정보 단절 등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파악된다. 특히, 민간병원이 의료공급의 중심(의료진 70% 도시 집중)을 차지하며, 농촌·산간 지역은 공공의료에 의존하나 의료 접근성이 낮고 병상수(인구 1,000명당 1.88개)도 OECD 평균(4.4개)에 못 미친다. 전체 인구의 30%만 민간보험에 가입되었으며, 공공·민간 간 의료정보 시스템의 단절은 의료서비스의 연속성과 형평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팬데믹 등 보건위기 시 정책적 대응력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아래 표와 같이 공공과 민간의 의료데이터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조성해 의료 접근성·효율성·정책 대응력을 동시에 제고하고자 한다.

정책 구분	정책명(시스템)	주요 내용 및 목적
의료정보 통합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공공병원(14.6%)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 표준화된 전자 의무기록 확산
	HIS(Hospital Information System)	병원 단위 정보 시스템 고도화. EMR과 연계한 진료정보 디지털화
1차 진료 연계	Teleprimary Care-Oral Health Clinical Information System	1차 의료기관(보건소)의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학교·지역사회 Outreach 프로그램과 연계, 자가 모니터링 기능-구강보건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기초의료 접근성 제고
디지털 생태계 구축	Building a Digital Health Ecosystem	공공-민간 플랫폼·기기·데이터 연계 통한 통합 생태계 구축(EMR 확산, 데이터 상호운용성 확보, 디지털 헬스 혁신 촉진 등)
데이터 표준화 및 보호	Data Standards	보건데이터의 구조·표현·교환 형식 표준화. 상호운용성 확보
	Malaysia Digital Health Certification Network(MDHCN)	디지털헬스 제품 인증 체계 마련. 민간기술의 제도적 포섭
	Data Governance Guideline	의료데이터의 보호·활용 원칙 정립. 기관 간 책임 명확화
법·제도 정비	Enactment of Digital Health Act (준비 중)	기존 Telemedicine Act 보완. AI·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법적 틀 수립

자료: 저자 정리.

다만, 정부의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성은 명확하나 실행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약요인이 지속되고 있다.

EMR 시스템의 확산 및 표준화 미비 보건부는 EMR·ELHR·HIS 기반 통합 의료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나, 공공병원의 EMR 보급률은 15% 미만이며 민간병원과의 연계도 거의 없다. 높은 초기 비용, 데이터 형식 불일치, 민간 참여 저조 등이 원인이며, 보건부 산하 Health Transformation Office의 표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기술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체계의 불균형 개인정보보호법(PDPA)은 존재하지만, 디지털 헬스 앱·웨어러블 기기 등의 확산 속도에 비해 의료데이터의 수집·보관·활용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부족하다. 정부는 보건백서(HWP)를 바탕으로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입법은 지연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대에 뒤쳐진 원격의료법 1997년 제정된 Telemedicine Act는 기본적인 진료행위만 규정하며, AI 기반 원격의료 플랫폼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제 기준은 미비하다. 말레이시아의료위원회(MMC)의 가이드라인도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기술·윤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디지털 의료기기의 인허가 체계 미흡 의료기기청(MDA)은 SaMD 지침을 마련했으나, 기존 심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AI·웨어러블 기기 등에는 부적합한 평가 체계를 사용 중이다. 이 때문에 제품 등록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는 혁신제품 우선심사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기술적 한계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의 확대를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향후 한국과 협력 기회를 통해 기술이전, 표준화 경험 공유, 법 제정 자문 등의 분야에서 시너지를 모색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한국과의 협력기회: 제도·기술·생태계 기반 연계방안

말레이시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정부 주도의 전략적 전환과 민간의 기술 도입이 활발하지만 의료 데이터 단절, 규제 미비, 인프라 격차 등 구조적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헬스케어 데이터 표준화, 법제 정비, 인력·생태계 기반 강화는 경쟁력 있는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다음과 같은 한국과의 협력과제를 고려할 수 있다.

가. 보건의료 데이터 통합 및 표준화 역량 강화

공공·민간 간 이질적 정보 시스템과 상호운용성 부족은 진료 연속성과 정책 수립을 저해한다. 말레이시아는 EMR·HIS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민간 참여 유도 및 법적 기반이 미흡하다. 반면, 한국은 HIRA 중심의 건강보험 빅데이터, EMR 의무화 및 인증제도, FHIR 기반 상호운용성 플랫폼 등 의료데이터 표준화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EMR 인증체계 개발, ▲데이터 표준 공동연구, ▲공공-민간 연계 플랫폼 설계 등 기업과 기관의 기술협력 기회를 고려할 수 있다.

나.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체계 정비

AI 기반 원격의료, 디지털 치료기기 확산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는 기존 Telemedicine Act와 PDPA 중심의 제한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디지털 헬스 관련 제도·기술·윤리를 종합 반영한 규제 환경을 구축하고 있어 ▲Digital Health Act 제정 자문, ▲SaMD·웨어러블 인증체계 정비, ▲개인정보 규제 정합성 검토 등 정책·제도 컨설팅 및 기술자문 협력을 할 수 있다.

다.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 조성 및 인력양성 기반 구축

말레이시아는 ICT 기반은 탄탄하지만 지역 의료 격차와 공공부문 기술 수용도 한계, 전문가 부족이 등이 디지털 케어 확산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AI 진단·관리 솔루션, ▲스마트병원 구축 경험, ▲디지털 헬스 전문 인력 양성 체계와 같은 정책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공동 시범사업(스마트 보건소, 디지털 병동), ▲전문가 교류 및 공동 교육, ▲공공기관-기업 간 기술이전 및 B2G 협력 모델 구축 등 민간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협력 채널이 마련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레이시아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의료체계 개혁의 중심축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데이터, 규제, 인력 등 핵심 기반의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 의료데이터 관리, 정책-기술 연계, 민관 협력모델 측면에서 비교우위를 지니며, 정책 자문과 기업 참여가 결합된 포괄적 협력 파트너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디지털 금융 혁신과 국제개발협력: 우즈베키스탄 KSP Plus 사례를 통한 시사점



우혜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평가팀
전문위원

hywoo@kdi.re.kr



정희선

정책자문·협력실
정책자문3팀 연구원

heesunny820@kdi.re.kr

팬데믹을 기점으로 디지털 금융 또는 핀테크(FinTech)는 기술 혁신을 넘어 금융 포용성과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핀테크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며 국제개발협력의 중요한 주제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우즈베키스탄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KSP Plus 사례를 바탕으로 디지털 금융과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 '전자정부, 디지털 농업, 온라인 산업 확대 등 580여 개 프로젝트를 포괄하는 디지털 우즈베키스탄 2030' 전략을 승인했다. 이후 금융기업 및 전자상거래 산업 육성, IT 기반 금융 혁신 환경 조성, 핀테크 서비스환경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IT Park를 설립하고 스타트업 및 IT 전문가 양성을 도모하며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경직된 금융 시장 내 중개 접근성이 낮았으며,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2020년)과 핀테크 서비스 확산에도 여전히 한계가 남아 있다. 이에 우즈베키스탄 경제재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을 요청했고, 2022년 10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승인하며 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KSP Plus는 기존 KSP의 단년도, 소규모 한계를 극복하고 다년도(2~3년), 대규모(10억 원 이상) 자문을 통해 법제도 정비,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까지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우즈베키스탄 KSP는 2004년 KSP 출범 시부터 꾸준히 협력을 유지해온 주요 협력국이라는 점과 디지털 경제라는 주제의 파급력을 고려해 Plus 사업으로 채택되었다. 초기 사업 흐름도는 1차연도(2022/23) 제도 설계 및 우선과제 도출, 2차연도(2023/24) 시범사업 설계 및 이행, 3차연도(2025/26) 시범사업 평가 및 지속가능성 제언으로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2차연도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설계'를 주제로 정책자문이 진행되었다. 1차연도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기초적인 지급결제 서비스 위주로 집중된 핀테크 산업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의 법·제도 구축 방안, 거버넌스 개선 방안, 신생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기술 서비스 도입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또 2차연도 종료 후, 연구진과 우즈베키스탄 정책결정자는 3차연도 사업에서 확인할 성과지표를 잠정 논의하에 정책이 발현되는 시간을 두고 3차연도 사업을 1년 순연하기로 했다. 이는 협력국의 주인의식을 존중하는 동시에 3차연도 영향평가 및 후속 조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었다. 이후 2024년 10월 디지털 스타트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스타트업 프로젝트 및 벤처 투자 환경 개발 증진' 대통령령(No. PQ-357)이 시행된 바 있다.

<표 1> 우즈베키스탄 KSP Plus 자문 주제

1차연도(22/23)	2차연도(23/24)	3차연도(25/26)
협력국 현황에 맞는 제도 설계 및 우선과제 도출	시범사업 설계, 이행 및 제도화	시범사업 영향평가 및 후속조치, 역량강화 방안
대주제 우즈베키스탄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정책자문	대주제 우즈베키스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설계	대주제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산업 규제 샌드박스 지속가능성 증진
세부주제 1. 규제 샌드박스 설계 및 제도화 방안 2. 핀테크 분야 규제 현황분석 및 우선과제 도출 3. 규제 샌드박스 운영·관리 제도에 대한 제언	세부주제 → 1.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구축 방안 2.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 개선방안 3. 핀테크 신생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정책 지원을 위한 기술 서비스 도입방안	세부주제(안) → 1.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제도 도입 현황과 제언 2.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추진 체계 개선 현황과 제언 3. 핀테크 기술 서비스 도입 현황과 제언

자료: 김정욱 외, "디지털 금융 분야 국제개발협력 개발효과성 증진 방안: 우즈베키스탄 핀테크 금융규제 샌드박스 KSP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4(2024).

이 사업에서 얻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 인프라 강화의 중요성이다.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뿐만 아니라 오픈뱅킹, 보안체계, 데이터 관리 등 기반 시스템을 확충해야 혁신 금융서비스가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평균연령 29.1세와 도시 인구 증가 등의 높은 성장 잠재성을 기반으로 2025년 경제성장률을 약 6%로 평가받는 한편,¹⁾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 기반한 규제 경직성과 기업 수익성 문제 때문에 비도시 지역의 유무선 통신인프라 접근성에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²⁾

둘째, 지속가능하고 폭넓은 거버넌스 협력 모델이다. 한국과 협력국 정부 간 협력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연구소, 중앙은행, ICT 부처, 민간협의회(우즈베키스탄 핀테크 협회)에서 현지 전문가를 고용하는 등의 다자간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사하며, 한국의 금융규제 체계 및 운영 방식이 어떻게 협력국에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국가 맞춤형 접근이 가능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디지털 금융규제를 설계할 때 유연한 규제와 위험 관리 간의 균형 유지가 필요한 만큼 정책 자문 시 연구진의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필수이다. 또 한국 초청연수 중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이 우리나라의 금융결제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민간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KSP Plus 사례 분석으로 디지털 금융 국제개발협력이 단순 기술이전을 넘어서 금융 포용성 확대와 경제 시스템 혁신을 목표로 해야 함을 확인했다. 개발도상국 핀테크 환경에서 한국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연한 규범 정책 수립 이후에도 한국 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 기회 확대, AI·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금융 협력 모델 제안 등 핀테크 생태계 조성과 국제협력 체계가 중요하다. 개발효과성과 경제협력이 ODA 분야에서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현재,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을 구축하려면 단기적 정책 자문이 아니라 KSP Plus와 같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1)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홈페이지 (<https://www.ebrd.com/where-we-are/uzbekistan/overview.html>, 2024.10.12. 접속)

2) 이민창 외, "2023-24 우즈베키스탄 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설계," KDI CID KSP 정책자문보고서

온두라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발전을 위한 지식공유 성과



최진아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3팀 연구원
jinachoi@k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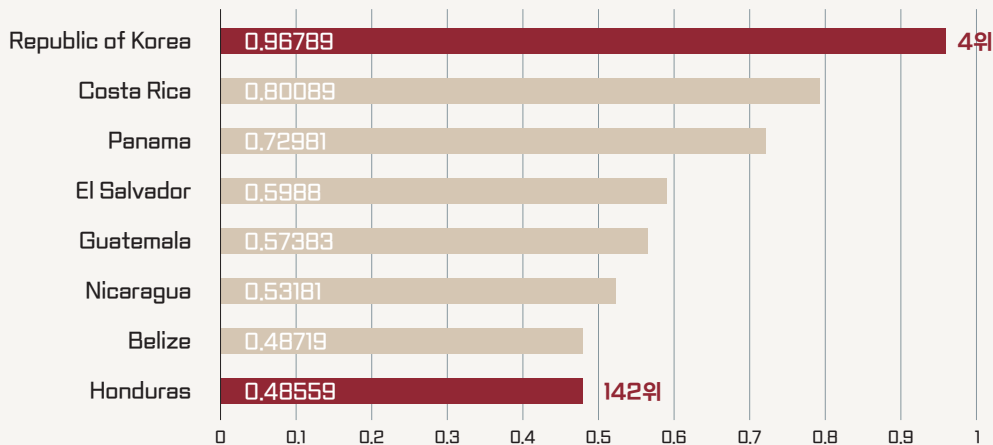
1. 온두라스 정부의 사회보장 시스템 혁신 목표와 KSP 정책자문 요청

2025년 11월 30일 온두라스 대선과 총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지난 3월 9일 예비선거에서 주요 3개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실시되었고, 각 정당의 후보 3인이 차기 대권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빈곤 감소, 치안 안정, 사회안전망 개선 등에 대한 유권자 요구가 강하며, 이번 대선에서는 이념 투표보다는 실리 투표가 대선 결과를 판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외교부, 2025).

온두라스는 물론 중남미에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개선과 관련하여, 온두라스의 현 카스트로(Castro) 정부는 디지털 행정 개혁과 사회보장 시스템 혁신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보장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자 2022년 설치된 온두라스 사회개발부(SEDESOL)는 시민에게 효율적이고 투명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복지 정보화는 온두라스 사회개발부의 핵심 정책목표이다.

그러나 UN의 전자정부평가(UN, 2024)에 따르면, 온두라스 정부의 디지털화 수준은 193개국 중 142위로 하위 약 26%에 해당하며, 중미 7개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그림 1 참조). 이에 온두라스 사회개발부는 부처의 사명, 즉 혁신적인 디지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국과 정책경험 및 지식을 공유하고자 KSP 정책자문을 요청했다.

그림 1 2024년 UN 전자정부평가: 한국, 온두라스 등



자료: UN(n.d.) 국별 데이터를 토대로 저자 작성.

2. 한국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발전 경험

한국은 2024년 UN 전자정부평가에서 193개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했다. 2014년 한국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UN 공공행정상'¹⁾ 시상식에서 '정보화 시대의 범정부적 접근 방식'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성과는 온두라스 정부가 한국 정부에 디지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국 정부는 현 수준의 선진 디지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 다양한 정책경험을 축적했다. 1990년대 사회복지 영역에서 정보화 논의를 시작한 이래 사회 복지시설의 정보 인프라 취약성 및 대민 서비스 특성 등의 제약으로 실질적인 정보화 추진은 지체되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사회복지 영역은 타 영역에 비해 정보화 수준이 저조했다.

한편 같은 시기에 사회복지지는 양적으로 확대하면서 복지행정 효율화 및 복지 서비스 투명성 제고가 사회적·정치적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복지행정 효율화 및 서비스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단으로 복지정보화 논의가 가속화했다. 복지정보화가 정책의제로 발전함에 따라 2008년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복지정보화를 추진했다.

2010년 지자체의 사회보장 급여 제공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하 행복e음)'이 구축되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복지사업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범정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대국민 복지 포털인 '복지로', 사회복지 시설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희망e음)' 등 핵심 시스템이 추가로 개발되었다. 2020년부터는 급증하는 복지재정 규모 및 복지 서비스 처리량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행복e음 구축 이래 약 25년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운영되며 한국 복지의 행정 및 서비스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하는 성과가 있었다.²⁾ 이 성과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사회보장 데이터 거버넌스에 기반을 둔다. 복지행정 주체별·목적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이 개발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토대로 부처 간, 공공-민간 간 협조하며 사회복지 정보의 통합범위가 단계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이루어 낸 성과이다.

3. 온두라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제언

한국의 정책경험을 공유하고자 KDI는 '온두라스 시민 및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디지털 등록 시스템 도입'을 주제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KSP 정책자문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의 세 가지 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리자 친화적 디지털 행정 시스템 도입 전략이다. 둘째,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플랫폼 설계이다. 셋째, 디지털 등록 시스템의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한 평가 프레임워크이다. 주제별 KSP 연구진은 온두라스 현지 전문가들과 공동연구로 온두라스 사회복지 제도 및 시스템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한국의 정책경험을 토대로 정책제언을 도출했다.

온두라스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 및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표 1 참조). 온두라스 정부는 사회복지 정보화에서 점진적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은 네 가지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첫째, 시스템 분절에 따른 행정 비효율성이다. 둘째, 정보 최신성 및 정확성 부족이다. 셋째, 수혜 자격 검증 및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미비에 따른 부정수급 및 비수급 문제이다. 넷째, 복지 서비스 정보 접근성 및 신청 편의성 부족이다.

1) UN은 공공행정의 중요성 인식을 제고하고, 세계 각국의 공공행정 발전을 선도할 목적으로 2003년부터 매년 우수 공공정책 및 제도를 선정하여 UN 공공행정상을 시상하고 있다.

2) 구체적으로 △복지신청 필요서류 종류 감소(2010년 7종→2024년 15종, 약 59% 감소) △시간당 복지 서비스 신청·채정 처리량 증가(2010년 207건→2024년 1,690건, 약 8배 증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규모 증가(2015년 11.4만 명→2024년 142만 명, 12배 이상 증가) 등 복지 행정과 서비스반에서 개선되었다 (홍화영, 2025).

<표 1> 온두라스 사회복지 관련 주요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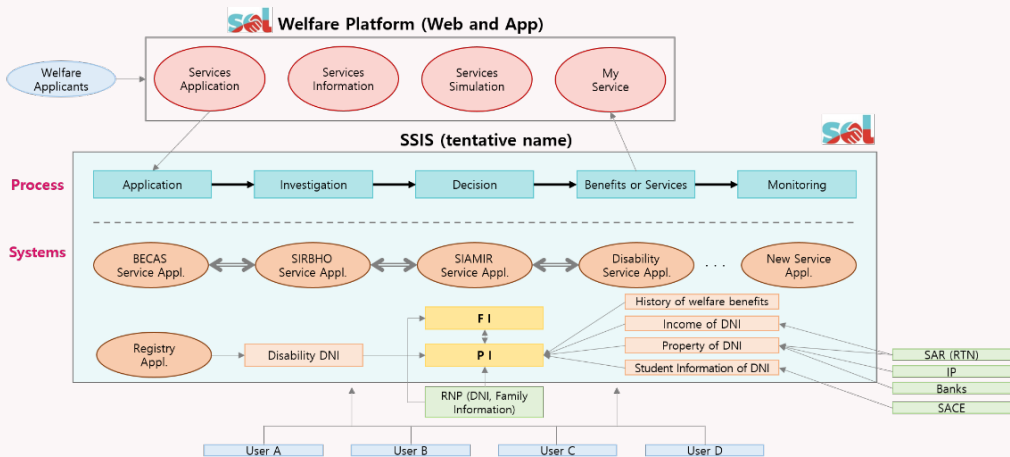
운영부처	시스템명	시스템 개요
사회개발부	ROPI	사회개발·복지 사업 및 관련 조직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정보시스템
	SIRBHO	온두라스 전역의 복지 수혜자 및 사회복지사업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이며 약 400만 명 이상의 수혜자 데이터 관리
	SIAMIR	본국으로 귀환한 온두라스 시민 관리·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
	BECAS	저소득 학생의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금 프로그램 관리 및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국민등록청	DNI	온두라스 시민 약 1,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며 한국의 주민전산망과 유사
국세청	RTN	납세자 정보, 개인·기업 경제 활동 등 세금 부과·징수 관련 정보 관리
교육부	SACE	공교육 행정, 학업, 인적 자원 등을 관리·감독하는 정보시스템

자료: E-Government Survey 2024(UN, 2024) 국별 데이터 토대로 저자 작성.

온두라스의 제도·기술 현황 및 한국의 정책경험 분석을 토대로 연구진은 온두라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To-Be 모델을 도출했다(그림 2 참조). To-Be 모델은 △기 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정보 체계를 '복지 서비스 중심'에서 '복지대상자(개인·가구) 중심'으로 전환 △복지 서비스 신청·조사·결정·급여 및 서비스·사후관리를 하나의 절차로 통합 관리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는 대국민 온라인 플랫폼 개발 △국민등록청, 국세청, 교육부 등 부처 간 실시간 데이터 연계 등을 핵심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연구진은 장차 구현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플랫폼 접근성 △서비스 효과성 △운영 효율성 △사회적 영향 등 네 가지 평가 영역으로 구성된 시스템 평가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그림 2 온두라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To-Be 모델



자료: 임근찬(2025).

4. 정책제언 이행을 위한 한국과 온두라스의 후속 협력 계획

2025년 7월 8일 온두라스 테구시갈파에서 개최된 '2024/25 온두라스 I KSP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진은 To-Be 모델과 로드맵을 발표했다(사진 1 참조). 연구진은 To-Be 모델을 구현하고자 사회개발부 고위정책결정자의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의 관심과 협조를 강조했다.

<사진 1> KSP 핵심 정책제언 전달(사회개발부 장관과 KSP 수석고문)



최종보고회를 더욱 뜻깊게 만든 시간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정보원)의 후속 협력사업 추진계획 발표였다. 2025년 4월 한국에서 실시된 '정책실무자연수'에서 사회개발부 차관(現 장관)을 비롯한 온두라스 사절단은 정보원을 견학했다. 사절단은 정보원이 운영 중인 8대 정보시스템의 발전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정보원이 겪은 다양한 시행착오와 극복 경험을 듣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연수를 계기로 형성된 온두라스 사회개발부와 정보원 간 네트워크를 토대로 KSP 후속 협력사업 개발이 이루어졌다.

2025년 하반기에 정보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관 '디지털정부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사업'의 일환으로 '온두라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후속 협력사업은 단기 정책제언의 이행뿐만 아니라 향후 시스템 개발사업 협력까지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온두라스 간 사회복지 정보화 지식공유 경험과 후속 협력 성과가 중남미 지역의 모범사례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기후변화 대응 관련 쟁점 및 현안: 국제개발협력을 중심으로



김대용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전문위원

dykim@kdi.re.kr



김지원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평가팀 전문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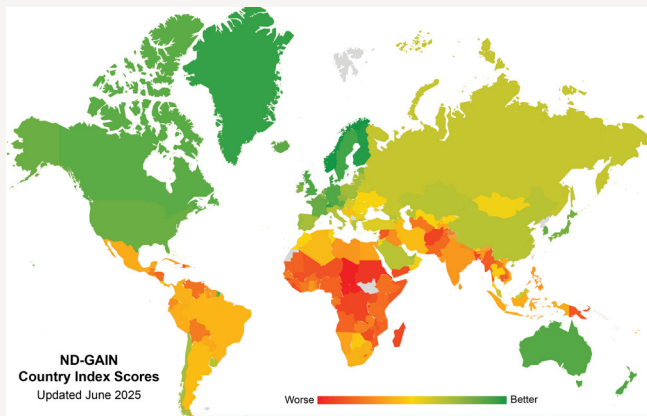
jiwonkim@kdi.re.kr

기후변화 대응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지구촌 숙원 과제이다. 1970년부터 2021년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의 90% 이상, 경제적 손실의 60% 이상이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했다. 개발도상국은 지리적·환경적 특성 때문에 재해에 본질적으로 더 취약하며, 기후 회복력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복합적 취약성은 ND-Gain 지수로도 명확히 확인된다. 실제로 전 세계 185개 국가를 살펴본 결과,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기후변화 취약성은 높고 회복력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의 원인을 '인간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규정했다. 이에 유엔기후

그림 1 ND-Gain 국가지수 지도



자료: Notre Dame Global Adaptation Initi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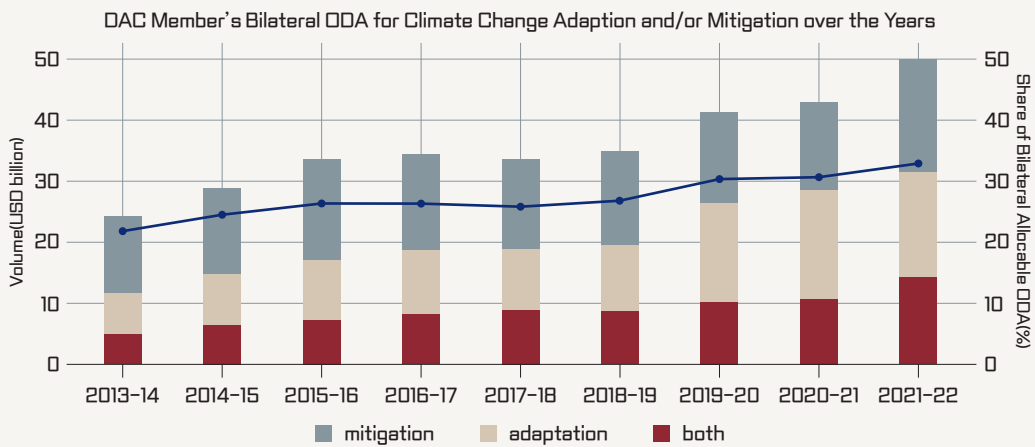
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를 중심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고 기후 안정화와 회복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제적 의제를 지속적으로 확장·발전시켜왔다. 초기에는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역할을 구분했다. 산업화의 혜택을 먼저 누린 선진국(부속서I)에는 기후변화의 주요 책임 주체로서 감축의무를, 부속서II로 분류된 국가에는 개발도상국(비부속서 국가)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파리협정을 계기로 선진국 중심의 책임을 강조하던 기존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단순한 공여-수혜 관계를 넘어 개발도상국의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기후변화 대응이 전 지구적 과제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기술, 재정, 역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격차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핵심 쟁점과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는 OECD CRS 통계상 기후 적응과 완화를 주목적 또는 부수적 목적으로 포함하는 경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이하 기후변화 대응 ODA)'으로 구분했다. 지난 10년간 양자 기후변화 대응 ODA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별 차별화된 접근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56%를 차지하는 아시아에는 완화 중심 지원이 집중되는 반면, 탄소배출 기여도가 낮은 아프리카에는 적응 중심 지원이 이루어졌다.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인구가 많고 산업화 속도가 빠른 국가는 기후 적응보다는 완화 중심 ODA 비율이 높았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이 최근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앞선 두 목표를 개별적이 아닌,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기후변화 대응 양자 ODA 추세



자료: OECD CRS Data(2023).

기후변화 대응 ODA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OECD DAC 공여국은 독일, 프랑스, 일본이다. 이들 공여국은 ODA 규모 자체가 클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주요 개발전략의 핵심요소로 삼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앞서 언급한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제적 지원 전략과 주요 이슈별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DI 연구보고서
뉴노멀 시대에 국제개발협력: 환경·에너지 편

연구 바로가기

<표 1> 주요 공여국별 국제개발협력 지원 전략 및 추진 방향

국가별 전략	재정 및 금융	에너지 및 기술	역량강화 및 인식 제고
프랑스 (AFD 기후 및 개발전략 2017-2022)	전체 개발 프로그램의 최소 50%를 기후 행동에 투자	협력국 기후정책과 장기저탄소 전략 분석한 개발 모델 제시, 에너지 전환전문 설비 제공	글로벌 규제 및 규범 지원, 국제협력 강화
독일 (BMZ 2030 개혁전략)	세계 최대 기후금융 기여국, 2020년까지 약 51억 유로 투자	203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에너지효율성 향상·완화·적응 중점 지원	기후 정책 수립 실행 지원
일본 (JICA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를 위한 기후변화 협력)	다양한 재정 수단 동원(GCF, 민간투자 등)	저탄소 도시 인프라 개발, 연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탄소배출저감 기술, 탄소포집 및 자원화, 에너지 관리기술 등 지원	적응·완화 계획 수립, 이행 및 모니터링 등 기후역량 강화, 기후변화국제기술지원 훈련센터 구축 지원

자료: 저자 작성.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 재난대응 역량 강화, 기후정책 수립 및 제도기반 마련 등을 위한 다각적인 전략이 병행되고 있다. 이들 전략은 모두 파리협정 이행을 기본 전제로 하며, '완화'와 '적응'을 조화롭게 이행하는 '기후탄력적 개발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CRD)'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국제개발협력이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4년 기준으로 OECD DAC 수원국 131개국은 자발적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LT-LEDS)을 제출하는 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여왔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있는 개발도상국은 본질적 취약성, 탄소배출과 경제성장의 동조화, 선진국 중심의 기후 통상정책 등 여전히 여러 제약 속에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IPCC가 제시한 기후탄력적 개발 경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 실현하려면 에너지 시스템 전환과 탄소 집약적 경제구조에서 탈피가 필수이다. 이를 이루려면 청정에너지 기술 활용, 에너지 효율 개선, 재해 위험관리 및 예측 시스템 등 완화와 적응 전반에 걸친 기술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며,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개발 협력 차원에서는 개발도상국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파리협정 이행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국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국제적 의제와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주도하는 뉴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개발도상국과 환경·에너지 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뉴노멀 시대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글로벌 과제를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KSP 출장 소회 인터뷰



이하민

YKSP 8기
24/25 폴란드 KSP 인턴
hamin12345@snu.ac.kr



이호서

YKSP 8기
24/25 폴란드 KSP 인턴
leehyoseo14@gmail.com

본인의 경험과 관련하여 이번 YKSP 8기에 지원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하민 제 학문적 지식을 실제 현장에 연결시켜 잘 활용하고 싶어서 YKSP 8기에 지원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사업에 큰 흥미를 느낀 것은 한국과 폴란드의 구조적 유사성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양국 간 실질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서 저는 SDGs의 슬로건인 'Leave no one behind'처럼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꿈꾸며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YKSP 활동을 알게 되었고, 대학생으로서 실무 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 생각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4/25년 폴란드 KSP 중간보고회 및 정책실무자연수 단계에 참여하며 보고회 지원은 물론 방한연수 지원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소감이 어떤가요?

이하민 폴란드 측의 접근법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하려는 것을 넘어서, 자국의 제도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한지 치밀하게 분석하더라고요. 질문 수준도 매우 높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효과적인 지식 공유를 위해서는 참가국의 정책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이호서 방한연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어서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정부 관계자분들을 가까이서 모시며 의견 업무를 수행해 볼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더불어 양국 간 활발한 질의응답을 통해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보며 국제협력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울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이번 연수 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이하민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번개장터에서 정품 검수와 안전결제 시스템을 소개하며 폴란드 측과 토의를 할 때였습니다. 폴란드 측에서는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의 신뢰 구축 메커니즘에 관심을 가졌는데, 기술을 특정 사회나 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요함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호서 네이버, 안랩, 윈스, 번개장터 등 민간기업을 방문하며 정부와 민간기업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윈스의 보안관제센터를 견학하며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생생하게 배울 수 있었고, 디지털 전환에 있어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보고회 및 연수 참여를 통해 무엇을 배웠으며 향후 다짐과 YKSP 활동을 통해 얻어가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이하민 개발협력에서 정책 번역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각국의 제도적, 문화적 환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YKSP 활동을 발판 삼아 단순한 정책 자문을 넘어서 각국이 자체적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호서 이번 보고회 및 연수 참여를 통해 단순히 방한연수의 실무뿐만 아니라 KSP 사업 주제에 대한 이해도 함께 심화할 수 있었습니다. YKSP 활동을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커리어를 구체화 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향후 실무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

국제개발협력학회 하계학술대회

2025년 6월 20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국제개발협력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에서 인적 자원과 성과’를 주제로 단독 세션을 운영했다. 이번 세션은 급변하는 글로벌 개발협력 환경 속에서 인력, 금융, 정책자문 등 개발협력 생태계의 주요 요소를 통합적으로 논의하며, 정책 실무와 학술 연구의 연계를 도모하고자 기획되었다.

세션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김정욱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김서영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기획실장은 국제개발협력 분야 전문인력의 이직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인력관리와 전문성 유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진이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DFC, 일본의 JBIC 등 주요 선진국 개발금융기관의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형 개발금융체계의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마지막으로 황금물결 연구원은 KDI가 운영하는 대표 정책자문 프로그램인 KSP의 인도네시아 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자문형 기술협력의 진화 과정과 현지 맥락에 기반한 성과평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김은영 국제개발컨설팅 KODAC 수석 컨설턴트, 김유리 한양대학교 교수, 이은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전문인력 양성에서 민관 연계 모델의 중요성, 개발금융의 전략적 활용, 정책자문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5년 국제개발협력학회 하계학술대회

변화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전략

2025. 6. 20.(금) ~ 21.(토)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주최

후원

전주시
JEONJU CITY

전주시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에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연구재단

세미나실1 (2분과)

15:50-17:20	[한국개발연구원] 국제개발협력 생태계에서 인적 자원과 성과
-------------	-------------------------------------

- 사회 **김정욱**(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발표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의 이직에 관한 연구”**
 김서영(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금융의 역할 및 과제-선진국의 사례와 시사점”
 이진이(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정책자문형 기술협력의 변화기제 분석과 맥락화 평가 -KSP 다국가 사례를 바탕으로”
 황금물결(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개발협력센터)
- 토론 **김은영**(국제개발컨설팅 KODAC)
김유리(한양대학교)
이은석(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행사

KDI-World Bank 글로벌 포럼

경제 전환을 위한 AI: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지식 파트너십 구축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월 25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2025 글로벌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경제 전환을 위한 AI: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는 지식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이 가져올 혁신적 성장 기회와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 협력과 지식 공유를 통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현장과 온라인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세계은행, 정부, 학계, 연구기관,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개회사에서 조동철 KDI 원장은 인공지능이 개발도상국에게 전통적인 성장 경로를 뛰어넘을 기회를 제공하지만, 준비가 미흡할 경우 발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며, 이번 포럼이 책임 있는 AI 활용을 위한 국제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조연설에서는 세계은행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총괄인 마헛 우탐찬다니와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이 디지털 전환과 안전한 AI 활용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 일본, 폴란드의 AI 기반 경제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혁신 성장과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회와 도전과제를 살펴보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AI 거버넌스의 방향성과 포용적 개발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지식 공유와 국제 협력을 통해 AI 시대에 포용적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표준화 및 협력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공유되었다.

이번 포럼은 KDI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한영 동시통역이 제공되었다. KDI와 세계은행은 앞으로도 국제적 지식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AI를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행사

- 일 자** 2025년 9월 25일(목)
- 시 간** 10:00~15:00
- 장 소** 대한민국 서울/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 주 최** 한국개발연구원, 세계은행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0:00~10:35	<p>개회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회사 조 동 철 KDI 원장 기조연설 마헛 우탐찬다니 세계은행 아시아-태평양 지역 디지털 총괄 김 명 주 시안전연구소장
10:45~11:45	<p>세션 1. AI 기반 혁신성장 생태계: 기회와 도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 표 ① 한국의 AI 기반 경제 전환 전략 서 중 해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초빙연구위원 발 표 ② 일본의 AI 규제와 히로시마 AI 프로세스 요시나가 료코 일본 게이오대학교 부교수 발 표 ③ 폴란드의 AI 기반 혁신 성장 사례 마리안나 시도로프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디지털경제국장 좌 장 김 정 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12:45~13:50	<p>세션 2. AI 거버넌스와 포용적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장 제이슨 알포드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토 론 자키 쿠리 세계은행 수석 디지털 전문위원 최 문 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장 안 준 모 고려대학교 교수
13:50~15:00	<p>세션 3. AI 시대 포용적 개발을 위한 지식공유의 역할과 국제협력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장 김 정 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토 론 박 경 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교수 김 종 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조정팀장 유 은 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 승 재 페르소나시 대표 김 기 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시용합표준단 팀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주요 연구 및 협력 실적

💡 2025년 국제개발협력연구

<p>I. 개발협력 정책연구</p>	<p>경제안보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식량·물·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안보의 중요성과 식량·물·에너지 안보 관련 개념 및 국제 동향 분석 ■ 아시아 중점협력국의 식량안보 수준과 현안 분석 ■ 에너지안보 개념 변화 및 국제협력을 통한 에너지안보 강화 전략 분석 ■ 식량-물-에너지 넥서스 기반 안보 개념 확립 및 국제개발협력 가능성 협력방안 도출 <hr/> <p>개발도상국 물가·생산성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와 인플레이션 사이의 비선형성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기후변화와 생산성 간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제기구·지역별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 동향 및 전략 분석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adaptation)으로의 국제개발협력 시사점 도출
<p>II. 지역·국가 심층연구</p>	<p>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공유와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유치 요인 및 효과 분석 ■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 사례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활성화 경험 분석 ■ 한국과 베트남 경제구역 비교를 통한 한국기업 참여 전략 제시 ■ 관련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 <hr/> <p>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활용 제고를 위한 호혜적 국제개발협력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리카 역내무역 추이 및 경제통합 현황 분석 ■ AfCFTA 협정 주요 내용 및 의의 검토 ■ RTA 효과 분석을 통한 AfCFTA 이행 시사점 도출 ■ AfCFTA를 활용한 호혜적 국제개발협력 방안 모색 <hr/> <p>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 분석: 아태지역의 무역환경을 중심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아태지역 무역·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 분석 ■ 국가별 대응 역량을 평가하여 한국의 기후 ODA 및 국제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시사점 도출 <hr/> <p>디지털 전환과 디지털서비스 무역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개념과 특징 분석 ■ 디지털 무역 이론 및 ASEAN·인도-태평양 지역 정책·규제 동향 분석 ■ 디지털 전환과 무역 확대가 개도국 성장·무역·소득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 도출 ■ ASEAN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제협력 방안 모색
<p>III. 한국발전경험 체계화 연구</p>	<p>국제협력과 지식공유 2025: 사례와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협력국의 분야별 정책사례에 대한 개별적 연구·조사(Case Study) ■ 몽골/주택금융, 베트남/농촌개발, 코스타리카/탈탄소, 헝가리/교통 정책의 사례를 통해 이와 관련된 사례 및 요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 KSP, EIPP 정책자문사업에 시사점 도출

 국제협력사업

아시아개발은행 연구소(ADB)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yond Boundaries: Navigating the Digital Landscape for a Green and Inclusive Future
아시아개발은행 (ADB)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리랑카 국가개발계획 지원
아시아생산성기구 (APO)	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리랑카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5
	20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4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키스탄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 중고소득국의 생산성 향상과 경제구조전환에 대한 정책연구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3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O Productivity Outlook 2022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 라오스 국가 생산성 마스터플랜 개발
세계은행(WB)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VID-19의 외국인고용허가제(EPS)에 대한 영향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시장 수요변화에 따른 숙련도 제고 정책연구사업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3차(카메룬, 서부발칸)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2차(10개국 개별 사업 및 성장 모형, 공기업 개혁 연구)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경제성장기금(GFGD) 사업 1차(8개국 개별 사업 및 거시경제, 포괄적 성장 연구)
미주개발은행 (IDB)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B Invest 협력사업: 한국의 디지털 전환 및 생태계 연구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틴아메리카와의 한국 인프라 서비스 지식공유 및 공동연구
유럽부흥 개발은행(EBRD)	20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집트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연수·연구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RD-KDI 공동 민관협력(PPP) 지식공유 콘텐츠 개발사업
유엔개발계획 (UNDP)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DI-UNDP 에티오피아 국가계획위원회(NPC) 15개년계획 정책자문 사업
적도기니 재정경제기획부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도기니 국가개발계획 자문사업
아부다비 개발기금(ADFD)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랍에미리트 ADFD 수출금융프로그램 타당성조사 사업

 국제 행사

<p>2024</p>	<p>세계은행: KDI-세계은행 녹색성장세미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2024년 2월 28일 / 워싱턴D.C. ■ 주제: Green Transition Strategy, Green Transition Financing, Carbon Pricing 등 <hr/> <p>브루킹스연구소: KDI-Brookings Joint Semin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2024년 10월 22일 / 워싱턴D.C. ■ 주제: Digital Technology, Inequality, and Global Economic Convergence <hr/> <p>ADB: 2024 글로벌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2024년 12월 17일(화) / 동경 ■ 주제: 글로벌 공급망과 지속가능발전
<p>2023</p>	<p>브루킹스 연구소: KDI-Brookings Joint Semina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2023년 4월 11일 / 워싱턴D.C. ■ 주제: Productivity in a Time of Change <hr/> <p>ADB: ADB 연차총회 “한국 세미나의 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2023년 5월 2일 / 인천 송도 ■ 주제: 아시아 복합위기 대응 방안, 글로벌 공급망개편과 아시아 역내 협력 강화, 디지털 전환, 코로나 19 이후 재정관리체계 등 <hr/> <p>ADB: ADB 연차총회 부대행사“KDI-ADB 공동세미나: 디지털, 기후, 그리고 회복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2023년 5월 4일 / 인천 송도 ■ 주제: 디지털 전환과 기후 효과 <hr/> <p>세계은행 TDLC: 2023 KDI-WB TDLC 공동 글로벌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2023년 11월 17일 / 인천 송도 ■ 주제: 개발도상국 발전 제약요소 및 기회 분석, 도시 정책, 지식기반 발전 등
<p>2022</p>	<p>2022 KDI 글로벌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2022년 10월 21일 / 서울 ■ 주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디지털 정책 사례와 협력
<p>2020</p>	<p>2020 KDI 글로벌 포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장소: 11월 19일(목) 14:00~16:00 / 서울 ■ 주제: 개발을 위한 혁신 *기업과 혁신, 도시와 혁신, 기술과 혁신



KDI CID 지식공유브리프 발간지 목록

2025년 2호



이슈톡

지식공유사업(KSP)이 나아갈 방향 | 손욱

핀테크(디지털금융)의 발달과 소득 불균형 | 이종화

동향 분석

칠레 핵심광물 개발 현황과 한-칠레 공급망 협력 방안 | 강나연

한-호주 기술협력 사례로 본 공급망 안정화 | 전영진

KSP 포커스

[2024/25 온두라스II KSP]

인프라 및 교통정보시스템 개발 전략 수립 | 서예주

중소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캄보디아 신용보증공사의 지식공유 여정

| 최진아

CID 연구포커스

디지털무역과 국제개발협력의 과제 | 김민정, 노다현

2025년 1호



이슈톡

한국경제 발전과정에서 금융의 역할 | 고승범

지속가능교통을 위한 저탄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강성철

동향 분석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민관협력사업(PPP) | 구석모

2025년 세계건설시장 유망 섹터 전망 및 시사점 | 정지훈

KSP 포커스

튀르키예: 수입대체산업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 | 윤근영

페루: 모든 이해관계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 박미서

CID 연구포커스

개발도상국 개발금융 역량강화체계화 및 지식공유 고도화 방안

| 김대용, 이진이

<p>2024년 특별호</p> <p>▶</p>	<p>이슈톡</p> <p>기후위기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 동향 강성진 ▶</p> <p>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와 미국 대선 후 산업·통상정책 박지형</p> <p>디지털 격차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책동향 김서용</p> <p>동향 분석</p> <p>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선이 ▶</p> <p>KSP 포커스</p> <p>[2023/24 불가리아 KSP]</p> <p>미래에 대응하는 불가리아 건설사업의 도전과 기회 김지원</p> <p>CID 연구포커스</p> <p>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개발협력: 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방호경</p> <p>신용보증제도 사업 기획 시사점: 베트남 신용보증제도를 중심으로 최다인, 하지유</p>
<p>2024년 3호</p> <p>▶</p>	<p>이슈톡</p> <p>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보건 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최희주</p> <p>유럽 공급망 실사지침과 우리 기업의 대응 오범택 ▶</p> <p>동향 분석</p> <p>한국 주택정책의 성과와 KSP 사업에 대한 시사점 권혁신 ▶</p> <p>개발효과성 담론에 대한 한국의 기여: GPEDC와 부산포럼을 중심으로 송지선</p> <p>KSP 포커스</p> <p>헝가리 EIPP: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최효정, 안치영</p> <p>CID 연구포커스</p> <p>불가리아 연구개발 현황과 시사점: 소피아테크파크 산학연 협력사례를 중심으로 남보라, 김하아람</p>
<p>2024년 2호</p> <p>▶</p>	<p>이슈톡</p> <p>기후 문제에 대한 개도국의 시각 정홍상 ▶</p> <p>디지털헬스케어의 중요성 및 지식공유의 의미 강재헌</p> <p>동향 분석</p> <p>국내 수소산업의 동향 및 시사점 이슬기</p> <p>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지식화와 수도이전 국제협력 추진방안 방설아 ▶</p>

<p>2024년 2호</p> <p>▶</p>	<p>KSP 포커스 [2023/24 칠레 KSP] 병원 대기 끝에 죽음이 아닌, 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홍기현</p> <p>CID 연구포커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ESG,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역할 및 정책과제 김대용, 황서영</p>
<p>2024년 1호</p> <p>▶</p>	<p>이슈톡 ESG와 국제개발협력 정무경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발주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 정지훈 ▶</p> <p>동향 분석 순환경제로의 전환, EU는 어떻게 추진해 가고 있나? 박상우 중동정세와 향후 전망 강문수 ▶</p> <p>KSP 포커스 리투아니아와 문화창의산업 (Cultural & Creative Industries) 안치영</p> <p>CID 연구포커스 아프리카 지역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국제개발협력 우혜영, 이소희</p>
<p>2023년 특별호</p> <p>▶</p>	<p>2023년 지식공유브리프 특별호를 기획하며 김정욱</p> <p>이슈톡 2023년 국제개발협력을 되돌아보며 김은주 2024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전망: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와 개발금융의 역할 권을 ▶ 기술협력 ODA,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협력 방호경 · 이소희</p> <p>동향 분석 2023년 동남아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전망 이요한 ▶ 2023년 아프리카 ODA의 주요 특징 및 전망 김은경 ▶ 2023년 중남미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특징과 전망 정상희 ▶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일본의 개발협력 과제와 새로운 대응: 2023년 개발협력대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김은지 ▶</p> <p>KSP 포커스 페루 경제특구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로드맵 수립 윤근영</p> <p>CID 연구포커스 탈탄소 기술 품목의 무역저해요인 분석 및 지식공유사업에 대한 시사점 방호경</p>

<p>2023년 3호</p> <p>▶</p>	<p>이슈톡</p> <p>핵심광물 자원부국과의 개발협력 전략 김연규</p> <p>해외건설기업 진출현황 및 시사점 정창구</p> <p>동향 분석</p> <p>국제협력 플랫폼, KSP의 의미 이미연</p> <p>유럽연합의 개발도상국 디지털 분야 개발협력 오정은 ▶</p> <p>KSP 포커스</p> <p>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KSP 사업 선정의 현황과 과제 이세훈</p> <p>베트남 창업생태계의 현주소와 단기적 개선 방안 서규혁</p> <p>CID 연구포커스</p> <p>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디지털 편 이진이</p>
<p>2023년 1호</p> <p>▶</p>	<p>이슈톡</p> <p>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 임호열 ▶</p> <p>글로벌 불황에 대한 안정망, 국제개발협력 성한경</p> <p>동향 분석</p> <p>글로벌 복합위기 시대, 개발협력 사업추진 방식의 변화 김은주 ▶</p> <p>스마트 생산 분야의 개도국 정책자문 수요와 정책 제언 방향 이재광 ▶</p> <p>COP 27 손실과 피해의 주요 합의사항 황금물결</p> <p>KSP 포커스</p> <p>우즈베키스탄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육성 유성희</p> <p>CID 연구포커스</p> <p>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국제개발협력 및 지식공유를 위한 정책과제 김대용, 이소희</p>
<p>2022년 3호</p> <p>▶</p>	<p>이슈톡</p> <p>개도국의 혁신투자는 다다익선인가? 정성철 ▶</p> <p>우리나라 '정책자문 ODA 사업'의 과제와 방향성 김성규 ▶</p> <p>동향 분석</p> <p>개발협력평가와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가능성과 도전과제 홍문숙</p> <p>아프리카의 정당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효과적 재정지원 방안 김유나, 홍은선</p> <p>CID 연구포커스</p> <p>국제협력과 지식공유 김정옥, 윤지희</p> <p>중미공동시장의 경제적 효과 및 한국의 중미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방호경</p>

2022년 2호



이슈톡

세계 식량 위기와 국제개발협력 | 이준원

포스트-코로나 세계에서의 KSP의 중요성 | 윤석현

동향 분석

COVID-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ODA | 김지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과 비시장 접근법 논의 동향 | 황금물결

KSP, EIPP 포커스

[불가리아 KSP] 디지털 혁신산업단지로의 전환 전략 수립 | 한재현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의 추진 배경 및 특징 | 김하아람

CID 연구포커스

연결성과 국제개발협력 | 홍성창

YKSP 스토리/CID 소식

YKSP, 그것이 알고 싶다 | 이태연

2022년 1호



이슈톡

국제개발협력의 본질과 한국 개발협력체계 발전방향 | 정혁

보호주의 진영화' 시대의 도래가 한국 개발협력에 던지는 함의와 과제 | 김양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법제: 녹색성장기본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으로의 전환 | 장은혜

동향 분석

KSP 고도화 전략과 지식공유사업법(가칭) | 홍성창, 김서영, 이미연

국제탄소시장과 ODA 활용 동향 | 김예림

KSP, EIPP 포커스

[페루 KSP] FTA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활용으로, 페루에게 전하는 한국의 경험 | 김지원 · 윤근영

[세르비아 KSP] 도시개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송지은

CID 연구포커스

2021 CID 국제개발협력 연구 | 우혜영

는 KDI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해당 게시판으로 연결, 의 경우 해당 유튜브 영상으로 연결됨.

지식공유 Brief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식공유브리프는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원고 기고를 받습니다. (소정의 원고료가 있습니다)

문의 김다은 연구원(044-550-4475, dek@kdi.re.kr)

발행 KDI 국제개발협력센터(30149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발행인 김정옥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

편집장 방호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장

편집위원 김민정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총괄

편집간사 김다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개발연구실 연구원

문의 044-550-4475, 044-550-4280

* 이 자료는 국제개발협력/지식공유 현안에 대한 이해증진과 국제개발협력센터 업무/성과 홍보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개발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